

으로 구성되며 정비계획으로 제안할 계획안을 작성하게 됨. 검토회를 통해 구체화된 정비계획은 마찌뜨꾸리 뉴스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알려지며 동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

- 마찌뜨꾸리 협의회: 마찌뜨꾸리 검토회가 보다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형태임. 검토회에서 제시한 계획안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마스터플랜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검토회와 마찬가지로 주민위원과 공무원, 파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 공공의 지원사항: 마찌뜨꾸리를 진행하면서 공공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을 지원함. 사업에 대해 재정을 보조하거나(주택 철거/건축설계/공동시설정비, 도로정비, 주민협정제에 따른 건축시), 재개발시 기존 거주민의 임대료를 보조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종합연구소(전문가)-마을만들기센터/공사(자치구출자) 등 다양한 지원 기관이 주민의 마찌뜨꾸리 사업을 기술적으로 지원함. 행정기관에 마찌뜨꾸리 전담 조직을 두거나, 마찌뜨꾸리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마찌뜨꾸리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공공의 역할임

지구계획과 마찌뜨꾸리: 고베시 마노지구

- 마노지구 마찌뜨꾸리 연혁

- 1965~ 공해반대 운동, 지역생활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운동 전개
- 1971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운동 전개→주민과 고베시간 협의를 통해 지구정비 기본방향 수립
- 1971-77 마찌뜨꾸리 간담회 구성 및 운영(계획작성은 주민이 하고 행정은 이에 협조한다'는 원칙 도출)
- 1978 마찌뜨꾸리 검토회의 결성
- 1981 고베시 마찌뜨꾸리 조례 제정. 마찌뜨꾸리 추진회 설치
- 1982 고베시장과 마찌뜨꾸리 추진회 사이에 '마노지구 마찌뜨꾸리 협정'을 체결함. 같은 해 마찌뜨꾸리 협정과 거의 같은 내용의 지구계획을 결정·고시함으로써 주민 마찌뜨꾸리 계획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건축행위시 사업주는 계획도와 계획 내용을 시에 제출하며, 계획 내용이 지구계획에 배치될 경우 시와 마찌뜨꾸리 추진사업 및 사업주가 협의하도록 함)

(2) 미국의 마을만들기: 마을계획

- 미국에서는 일부 도시에서 주민 주도형 마을계획을 수립한 전례가 있음
- 미국에는 커뮤니티개발공사(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라는 비영리 기구가 각 마을마다 있어서, 주택건설, 보육소 설치, 고용 훈련 등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마찌뜨꾸리 협의회 운영, 지구계획과의 연계 등 계획단계에서는 마을만들기가 활발하지만 막상 사업 자체는 주민 조직이 담당하지 못하는 일본 마찌뜨꾸리를 보완하는 장치로 미국의 커뮤니티개발공사제도를 들 수 있음
 - 미국 마을계획 수립사례

(1) 시애틀: 마을계획의 수립/시행, 마을환경 개선 활동, 주민조직이 계획수립을 주도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마을단위로 수립한 계획은 시애틀 도시기본계획의 기초로 삼음. 마을계획 수립 및 마을 현안 해결을 위해 마을지원기금(Neighborhood matching fund)을 설치하고 시정부가 예산을 지원함

(2) 세인트피터스버그: 주민조직과 시정부가 함께 마을 계획 수립 후 주민협의체, 전체 마을주민, 시정부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의 순서로 승인. 시의 마을지원과에서 승인된 마을 계획에 대해 사업계획 및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함. 매년 약 15만달러의 마을협력기금 조성하여 시청 실무위원회가 주민대표가 공동 심사하여 지원사업 결정

- 커뮤니티개발공사(CDC): 근린 재생을 위해 저렴 주택 공급, 보육소 설치, 고용기회 창출, 직업 훈련 등을 담당하는 비영리기관. 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음
- 인터미디어리(Intermediary): 기업이나 재단이 커뮤니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며,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CDC에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함. 인터미디어리에 대해서는 세제 우대 조치를 적용함

(3) 브라질의 마을만들기: 뽀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

- 참여예산제는 각 마을에서 선출된 주민이 평의회를 구성하고, 평의회에서 시의 예산안을 직접 수립하는 제도를 의미함
- 이는 주민의 의한 공공 예산의 집행이라는 점에서 한국처럼 시청, 군청에서 예산안을 작성해 제출하면 이를 시 의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최종 예산을 확정하는 체제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 마을만들기가 마을 단위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수단임에 비해, 참여예산제는 시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 자치를 이루어 나가는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주로 남미 쪽의 국가에서 좌파 정부의 집권과 함께 널리 확산되었음
- 한국에서도 광주 북구, 울산 동구, 전남 나주시 등에서 참여예산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의 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시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라기보다는 예산 책정 과정에 주민 대표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참여예산제를 간단히 소개하기 위해, 네이버에서 '참여예산제'를 키워드로 검색한 자료를 수록합니다.

참여예산제의 소개

- 참여예산제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Montevideo), 베네주엘라의 카라카스(Caracas), 아르헨티나의 호자리오 등의 남미에서 실시되었으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캐나다의 토론토, 프랑스의 샹뜨데니스, 벨기에의 브뤼셀, 호주, 영국 등에서 그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의 실험이라 할 수 있음
-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에서 참여예산제가 확산된 것은, 단순히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힘만이 아니라 브라질 노동자당(Partido dos Trabalhadores; PT)의 지역정부 장악력 때문에 가능하였음

- 브라질에서는 지역 명망가들이 기성 정당과의 거래를 통해 지역 개발 예산을 따내는 '후견주의'(clientelism) 관행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러한 명망가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참여예산제였음
- 참여예산제가 의회의 예산승인권력을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어 노동자당 소속 외의 시의원들은 참여예산제를 반대하였으나, 예산안을 수립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이므로, 노동자당의 강력한 추진에 의해 행정부의 예산 계획 수립시 개별 시민, 시민단체, 지역조직들로 구성된 참여예산기구가 주도하는 형태의 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었음
- 도입 후 참여예산제의 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1996년의 경우 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모든 모임에 참석한 시민의 수는 전체 시 인구의 8%인 10만 명에 달하고 있음
- 뽀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1996년 UN 하비타트(세계주거권회의) 2차대회에 '세계 40대 도시 혁신사례'로 선정되었고, 세계은행도 참여예산제를 정부와 시민사회의 훌륭한 협력모형으로 평가하였음
- 참여예산제의 효과
 - 예산결정의 공정성 및 집행의 효율성 확보
 - 시민복지 개선 효과: 도시의 모든 주거지역의 98%가 수돗물을 사용(1988년에서 75%)하고, 하수처리구역도 46%에서 98%로 증가했으며, 공립학교의 수는 1988년 29개에서 86개로 늘어남
 - 도시의 빈민거주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
 - 예산을 둘러싼 부정부패의 근절
 - 정치권과 시민간 유대관계 강화

한국 주민참여예산제 시도 사례

- 1999년 인천광역시에서 예산편성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정책 토론회와 시민예산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사전심사제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
- 경기도 부천시, 전남 나주시, 전북 익산시 등에서도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분야별 토론회 후 주민의견 수렴
- 2002년 서울시 및 군산시에서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주도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 2003년 경상남도 예산편성시 시민단체, 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등 공동으로 환경포럼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
- 2003년 전남 나주시에서 기편성한 예산총액과 편성 분야, 비율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중점 투자분야와 축소분야 등을 제시하도록 함
- 2003년 10월 광주 북구에서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위원수 132명)를 구성하여 2004년 예산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추진중임
- 2003년 11월 울산시 동구에서 주민참여예산추진단을 구성한 이후, 2004년 6월 시민위원을 위촉(82명)하고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함. 이후 10월에 분과별 회의를 통해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분과위원장들과 구청장으로 구성되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최종 의견을 조정하여 11월까지 다음해 예산을 확정하기로 함
- 2004년 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시의원들과 공무원의 반발로 1년여동안 실무

-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 표류중
- 2005년 3월 순천시 의회에서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안' 가결하고 2006년 본예산 편성안 작성부터 주민참여를 시도하기로 함
-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1억원 이상의 주요예산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

4. 마을만들기의 정착, 무엇이 필요한가?

- 마을만들기의 정착을 필요한 조치들은 시정개발연구원의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1999"에 잘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개략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 마을만들기 지원팀 운영
 - 마을만들기 모델사업 추진
 - 마을만들기 전담 행정부서 설치
 - 마을만들기 지원기금 운영
 -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커뮤니티를 주제로, 마을 단위로 주민이 참여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참여형 주거지 정비수법을 제안하거나, 커뮤니티 행정체제의 정착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국토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등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기관들에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보고서들을 작성하였고, 석박사 논문으로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
- 마을만들기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제도의 연구는 아니며, 오히려 정치적 추진력이 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일본의 혁신지자체나 브라질의 노동당처럼 주민밀착행정, 주민자치, 마을만들기를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지자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그러한 정당이 있다면, 주민자치형 행정 체제로 마을만들기의 도입이 가능할 것임
- 마을만들기는 정책임과 동시에 일종의 생활 문화임
-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내 마을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마을만들기는 뿌리내릴 수 없습으며, 내 이웃에게, 우리 동네에, 우리 시에 어떤 일이 있는지, 시장과 시의원과 공무원은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맡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마을을 가꾸기 위해 내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이 있는지, 마을 사람 각자가 그런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다면 마을만들기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임

[참고] 일본 마찌쯔꾸리 발전 연혁

1923 관동대지진 후에 행정협력 조직으로 정내회·자치회 탄생. 세계대전 중 전쟁협력조직으로 변하여 1947년 연합군총사령부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1952년부터 부활

1947~53 혁신자치체(사회당, 공산당, 공명당, 민사당) 초기. 홋카이도와 큐슈의 나가노, 후쿠오카, 도쿠시마 등에서 혁신단체장 배출하였으나, 주민 자치 문제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음

1953 시정촌 합병 및 중앙정부의 기관 위임사무 급증, 지방재정의 공핍화

1956 교육위원의 공선 폐지, 지방회의의 권한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1950s~1960s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인구의 대도시 집중 가속화

- 1960s~1970s 고도성장 과정에서 각종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지고, 이에 대응하는 주민운동이 활성화됨
- 1963 요코하마, 교토, 오사카, 기타큐슈 등의 대도시에서 혁신자치체 정부 등장, 도시문제(생활환경 악화, 사회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지역민주주의가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
- 1964 전국 혁신시장회의 결성, 혁신자치체가 공통의 조직과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
- 1960s 지방도시의 역사적 도시 보전운동, 마찌쯔꾸리 공익신탁, 마찌쯔꾸리 NPO 등의 조직 탄생으로 이어짐
- 1964 효고현 카와니시시의 '택지개발 사업지도 요강' 제정(환경파괴, 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자체적 지침)
- 1967 도쿄 혁신도지사 탄생, 100개 이상의 시에서 혁신지자체장 당선. 지자체에서의 직접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하고 지방정치에 시민의 참가를 확대함
- 1969 도쿄도의 공해방지조례 제정
- 1970 과소법(전국 시정촌의 36%를 과소지역으로 지정하여 30년간 61조엔 투자)
- 1970s 혁신자치체가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마찌쯔꾸리라는 말이 빈번히 사용됨. 혁신자치체의 마찌쯔꾸리 시책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무산(無産)시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로·하천 등 광역 인프라 정비, 대규모 개발 중심이었던 도시계획에 대해 반대 기법으로서 지구계획, 사회계획 등을 강조하며 탄생한 것이 마찌쯔꾸리라 할 수 있음
- 1970s 지방 중소도시의 마을진흥운동(일품일촌운동), 대도시에서는 행정이 주민참가를 요청하여 주민이 참가하는 마찌쯔꾸리 성행
- 1974 후쿠시마현 미시마정의 고향창생운동(고향 방문 촉진사업)
- 1975 동경도 세타가야구의 수복형 마찌쯔꾸리(재개발사업) 시작. 마찌쯔꾸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16년간 사업을 운영
 - 1975 민선선거 부활(구청장 선거 선출, 구의 독자적 정책권)
 - 1980 세타가야구 도시정비공사 설립
 - 1982 구청에 도시 디자인실 설치
 - 1983 우리마을 가꾸기 추진원 제도 도입
 - 1989 도지 디자인 모니터 제도
 - 1991 지역 행정체계 확립, 주민 주도 마찌쯔꾸리 실시
 - 1992 도시정비공사 내에 마찌쯔꾸리 기금과 마찌쯔꾸리 센터 설치, 세타가야 마찌쯔꾸리 포럼 발족(주민 자주조직)
 - 1996 마찌쯔꾸리 지구담당제 실시. 구청의 직원들이 담당지구를 정하여 주민의 마찌쯔꾸리 활동 지원
- 1978 주거환경정비모델사업 도입. 전면 철거가 아닌 수복형 주택개량수법 적용.
- 1979 오이타현에서 일촌일품운동이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
- 1980 지구계획제도 창설(현재, 지구계획의 결정권자는 시정촌임)
- 1980s 각 자치체가 행정조직 내에 마찌쯔꾸리 전담 부서 신설하기 시작.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현상공모. 동경도 무사시노시의 소각장 입지 결정시 각 지구에서 선발된 주민위원회의 토론을 통해 시청에 입지 제안. 동경도 미타카시의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최초 기획에서 건설 후 운영까지를 주민이 주체적으로 실천하였음

- 1980년대 후반 이후 인구규모 15~50만 규모의 시정촌의 인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증가
- 1988 중앙정부의 고향창생 1억엔 지원사업(전국 3245개 시정촌 중 낙후된 3057시정촌에 1억엔씩 지원), 교부금의 용도를 두고 주민들에게 아이디어 공모. 각지에서 독자적 마찌쯔꾸리 사업이 가속화됨
- 1990s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시 주민참가에 의한 마찌쯔꾸리를 추진하려는 운동이 동경도, 가마쿠라시, 카와구찌시 등에서 시행
- 1991 경제기획원 '국민생활백서' 보고서: 각 지역 생활수준을 종합지표로 평가. 지방이 더 풍요롭다는 결과가 나옴
- 1994 주택 마스터플랜 제도 도입. 구시정촌 차원의 주택공급계획이 수립되어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체제가 구축됨
- 1996 주민활동 촉진법안(NPO법안) 상정. 비영리 민간 조직 활성화 지원

[참고문헌]

- 한국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싶다면?
 - 시정개발연구원,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 마을만들기 사례, 1999
- 일본 마찌쯔꾸리 제도를 공부하고 싶다면?
 - 문승국, 일본의 주민참가형 도시정비수법에 관한 연구: 마찌쯔꾸리의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논문, 1998
 - 김찬호, 후기 산업 사회의 도시 재생과 주민 참여에 관한 연구: 일본 토요나카시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1997
 - 김창석·남진·공명렬, 일본 밀집주택시기지정비촉진사업에서의 주민참여와 공공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9권 제6호, 2004년 11월
- 일본 외 다른국가의 마을만들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싶다면?
 - 시정개발연구원,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 마을만들기 사례, 1999
 - 국토연구원,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 연구, 2000
- 한국 및 영국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을 살펴보고 싶다면?
 - 이정화,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하남시 도시계획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석사논문, 2005
 - 송인성·이부귀 역, 영국의 도시기본계획: 합의에 기초한 정책 실현 프로그램,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0

제3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백서 인터넷으로 보는 도시계획 통계와 여론조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백서

송영일
공간연구집단 연구원

하나의 정책이 탄생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정책으로 영향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영향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영향을 받게 되는지, 경제적으로는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흔히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집단들이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서울시 정책 중 상당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만들어집니다. 정책 연구를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전문지식과 더불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객관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이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게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실들이 교묘하게 감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강좌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역할을 공정성, 개방성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서울시 부시장과 관련된 청계천 비리 사건이 터졌고, 이 사건은 꼬리를 물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과 관련하여 도심지 고층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정연에 이에 대한 용역을 주었고, 시정연에서 '도심부발전기본계획'이라는 서울시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시정연은 서울시, 특히 서울시장과 밀접히 얽혀있는 조직입니다. 서울시 정책이 시장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지만, 그 변화되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많은 시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강좌에서는 연구원에서 수행한 보고서들과 많은 활동들, 그리고 조직이 고건 시장 시기와 이명박 시장 시기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정연은 1992년 고건 서울시장 시에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에 의해서 탄생했고, 지금까지 서울시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년 시정연 1년 예산 150억원 중 서울시 출연금은 1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시정연은 서울시장의 의도에 크게 어긋나는 정책을 개발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예산이 서울시장의 쌈지돈은 아닙니다. 사실 시민의 세금이죠. 그리고 시민들이 뽑아준 서울시 의회도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는 민노당을 포함해서 서울시장과는 다른, 다양한 정책지향점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도 시정연의 연구 결과를 평가하고, 또한 필요하면 정책개발을 맡길 수 있으면 시정연이 좀 더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정연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민제안란이 형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연구까지 연결되면 시정연의 개

방성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목차

1.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2. 시정연은 어떤 조직인가?
3. 이명박 시장 이후의 시정연
4. 다른 지역발전연구원

I.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1. 전문가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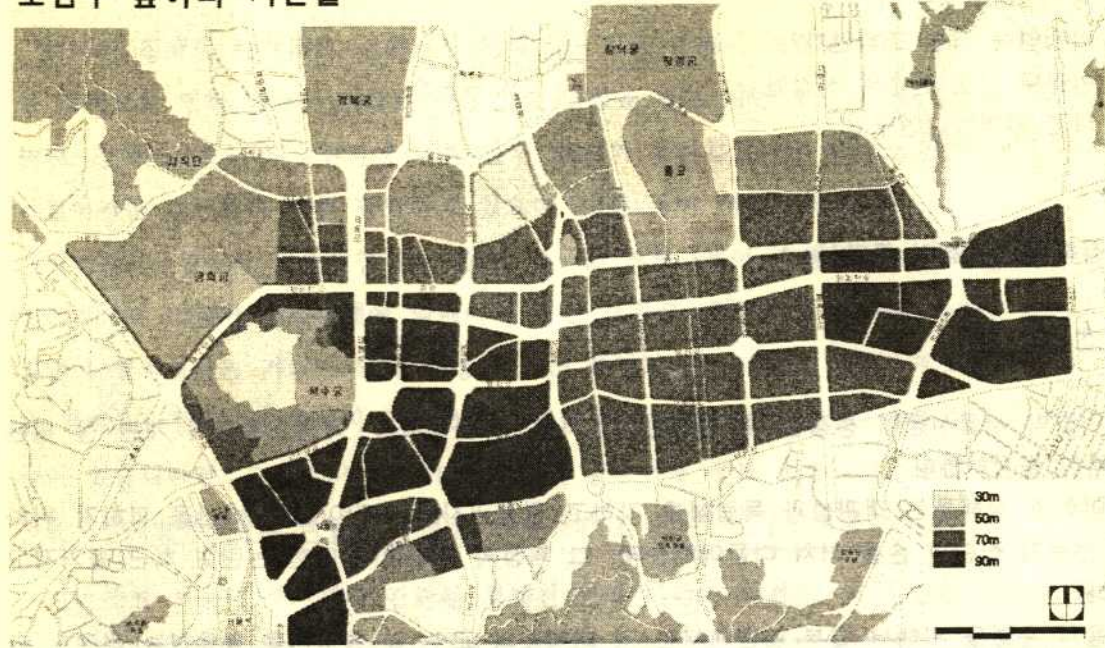
- 이명박 서울시장 등장 후 청계천복원사업, 뉴타운사업,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많은 정책이 등장하였다.
- 이러한 정책들은 객관성과 독립성을 기하고 결정권자의 독단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의 손을 거쳐 다듬어지는데, 그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최근 불거지고 있다.
- 용역 수행을 위해서 일부 지방에서는 각 대학교의 교수 및 연구진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자체 실시 이후 광역단체별로 '지역발전연구원'을 두고 있다. 서울시 정책의 상당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하 시정연)을 거치고 있다.

2. 하나의 예: 도심부 발전계획

- 2000년 서울 '도심부관리기본계획'이 발표되었으며(서울시 발간이나 시정연 연구진에 의해서 만들어짐), 그 이전 1999년에 시정연은 이미 '서울 도심부 성장관리계획',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 이 기본계획들에 따르면, 도심은 상업적 개발보다는 역사 및 문화가 보존되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도심재개발은 전면 철거 위주의 재개발보다는 수복형 재개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이 잡혀있었다. '서울 도심부 노후시가지 수복형 정비수법 연구'(2000)는 그와 같은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출간되었다. 뿐만 아니라 도심의 역사, 문화가 상업적 이윤 추구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 그러나 이명박 시장 등장 이후 상황이 바뀌게 된다. 청계천 복원 사업의 시행으로 도심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 2004년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을 발표하여 기존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을 대체했다. 이 계획 역시 시정연 연구진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계획을 통해서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건축가능 건물의 높이가 기본적으로 20m 높아졌으며,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건물 높이, 용적률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청계천 주변의 도심재개발의 방식으로서 대규모 재개발을 도입하였다.
- 청계천 복원이 생태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개발 확대 계획안

은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복원 의도를 순수하게만 바라볼 수 없게 한다.

도심부 높이의 기본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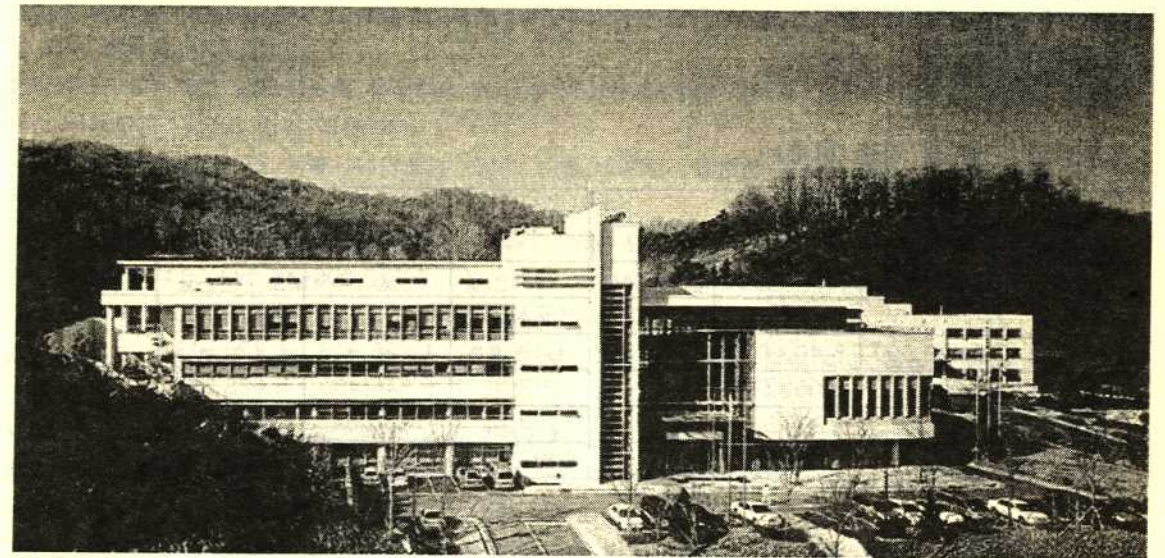
<도심부발전 기본계획>

3. 공정성

- 지난 5월, 언론매체에서는 이러한 계획변경 과정에서 서울시, 시정연 간의 투명하지 못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사실 확인은 안 되었지만, 일부 연구원이 연구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을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모종의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 라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 이처럼 정책결정자와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는 연구원의 관계가 투명한 것만은 아니다. 표면은 객관성, 공정성을 띄지만 우리는 그 속을 한 꺼풀 파헤치고 들어가 봐야 한다. 연구원도 서울시 출연금, 즉 시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만큼 연구원이 공정한 역할을 하는지 의회 및 시민의 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정책 감시를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연구원에 대해서도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조직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II. 시정연은 어떤 조직인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전경>

1. 시정연의 연혁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1992년 고건 서울시장 시에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에 의해서 탄생했다.

- 시정연의 원장은 서울시와 연구원을 연결하는 주된 통로로 서울시장의 성향에 따라서 매번 교체되는 정치적인 자리이다. 현재 8대 원장인 백용호 원장은 이명박 시장 당선 이후 부임되었으며 역대 8명 원장 중 유일하게 3년 이상을 재임하고 있다. (2005년 9월부터 전직 재경부 차관을 역임했던 강만수 원장 취임)

- 이전의 시정연 대다수의 원장들은 도시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나, (전 백용호 원장의 경력에는 여의도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아더앤더슨 컨설팅 등이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

<시정연의 연혁>

2005	08.26	9대 강만수 원장 취임
2003	01.27	서초동 청사 이전
2002	08.26	8대 백용호 원장 취임
1999	10.18	7대 권원용 원장 취임
1998	08.06	6대 강홍빈 원장 취임
1997	02.01	5대 서준호 원장 취임
1996	06.10, 02.10	3,4대 이병송 원장 취임
1994	09.23	2대 정세욱 원장 취임
	10.01	개원
1992	09.23	초대 최상철 원장 취임
	07.14	재단법인 설립허가
	01.15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조례 공포

2. 시정연의 재정

- 시정연은 서울시가 출연한 기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2004년 시정연 1년 예산 150억 원 중 서울시 출연금은 100억원에 달하고 있어 서울시의 예측은 불가피하다. 자체 수탁사업으로 충당하고 있는 예산은 50억이나, 이마저도 대부분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발주된 연구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정연의 수입 및 지출 현황>

구분	수입 예산액			구분	지출 예산액		
	2005년	2004년	증△감		2005년	2004년	증△감
계	15,772,000	15,144,000	628,000	계	15,772,000	15,144,000	628,000
출연금	10,372,000	9,744,000	628,000	연구사업비	3,933,618	3,616,796	316,822
자체수입	5,400,000	5,400,000	0	사업운영비	1,728,918	1,728,918	0
수탁사업비	5,000,000	5,000,000	0	인건비	5,846,400	5,688,290	158,110
출판물판매	20,000	20,000	0	예비비	463,064	309,996	153,068
준비금전입	380,000	380,000	0	수탁연구비	3,800,000	3,800,000	0

3. 시정연의 인력

- 현재 시정연의 박사진을 살펴보면, 외국박사 41명, 국내박사 23명이 포진하고 있다. 미국에 편향된 여타 국내 기관의 실정과 마찬가지로 외국박사의 70%는 미국 학위를 취득하였다.

4. 시정연의 조직구성

- 시정연의 조직은 도시계획연구부, 도시경영연구부, 도시교통연구부, 도시환경연구부, 도시사회연구부, 도시정보연구부 및 특별연구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별연구조직은 이슈에 따라 일시적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현재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대중교통개편지원연구단, 서울마케팅연구센터, 서울경제연구센터, 지역균형발전연구단, 그리고 동북아연구센터 등이 있다.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은 서울시장 취임 이튿날부터 가동되었다.

III. 이명박시장 이후의 시정연

1. 청계천

- 2005년 10월 1일 청계천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복원을 시작할 때의 여러 혼란과 논란들을 잊은 듯하다.

- 시정연은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05)를 통해 경제적 효과가 23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청계천 기대효과 및 성과' (2005)를 통해 주변 온도가 내려가고 및 오염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였다.

- 또한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도심산업의 동향과 전망', '청계천 복원에 따라 도심부 인구 20여년 만에 인구감소 둔화' 이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주변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그리고 도심인구가 늘었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 지나친 부풀리기라는 반대논리가 제기되었다. (아래기사 참조)

서울시의 지나친 '청계천 띄우기'

[연합뉴스 2005-09-12 17:45]

안승섭 기자 = 10월1일 청계천 복원사업 준공을 앞두고 서울시의 '청계천 띄우기'가 일부 과열 양상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논리적 근거가 약한 보도자료를 무리하게 포장해 내놓는가 하면 심지어 과거에 써먹은 자료를 '재탕'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12일 배포한 '청계천 복원에 따라 도심부 인구 20여년 만에 감소 둔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그 비근한 예다.

시정연은 급조한 듯한 인상을 주는 이 자료에서 "2002년 7월 청계천 복원사업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도심부 인구는 2003년말까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다"면서 "그러나 2004년 상반기부터 안정을 찾아 현재까지는 거의 평균 0%대로 인구 감소율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도심부의 실제 인구 변화는 시정연 보도자료 내용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연에 재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청계천 복원계획 발표 이후 서울 도심부 인구의 반기별 증감 추이를 보면 ▲2002년 하반기 1.1% ▲2003년 상반기 -2.3% ▲2003년 하반기 -6% ▲2004년 상반기 0.3% ▲2004년 하반기 -0.7% ▲2005년 상반기 -1.8%로 나타났다.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 하반기까지 18개월 동안은 반기 평균 2.6%, 그후 2004년 상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18개월 동안은 반기 평균 0.7% 가량 감소한 셈이다.

결국 체감도의 차이는 다소 있을 지 몰라도 청계천 복원계획 발표 이후 도심부 인구는 큰 흐름에서 감소세를 유지해왔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이달 7일 배포한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도심산업의 동향과 전망' 보도자료도 비슷한 사례다. 시는 이 자료에서 "청계천 공사 착공 당시 논란과 우려가 많았으나 복원사업 추진 이후에는 도심과 청계천 주변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상당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계천 복원의 경제적 성과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 자료는 서울시가 발간하는 '서울경제' 3월호에 이미 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반년 전에 발표된 자료를 청계천 복원을 목전에 두고 마치 새로운 자료인양 언론에 배포한 셈이다.

청계천 복원이 이명박 시장의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성과를 무리하게 부풀리려는 비상식적 행태가 계속된다면 오히려 빛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

2. 대중교통체계 개편

- 이명박 시장 취임 이전부터 버스노선의 간선, 지선의 위계화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 개편방안' (1995)을 비롯하여 '제2기 지하철 전면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전면구상' (2000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 버스중앙차로제도 시장 취임 이전부터 천호대로에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행되고 있었고, '대중교통 중심가로제 도입방안 연구' (2002)도 진행중이었다.

-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환승할인에 대한 연구도 '대중교통요금체계의 다양화 방안 연구' (1999)를 통해 시정연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 다만, 수익성을 위해 거리비례제에 대한 연구는 2003년 이전 시정연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중교통 개편의 모델이 된 꾸리찌바에서도 버스요금 단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 시정연이 2003년 12월 발표한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방안' (2003) '은 수익자부담원칙

으로 통합요금거리비례제가 핵심이다. 버스, 지하철 공히 기본요금에다 거리에 따른 할증을 하는 방식이다. 물론 시행 전 버스의 경우 환승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대중교통에도 본격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이 도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 20억대 용역 '재탕' 논란

[한국일보 2002-08-28]

서울시가 이명박(李明博) 시장의 교통관련 분야 공약 이행과 교통문제 해결 등을 위해 20억여원을 들여 추진하고있는 용역과제의 상당수가 이미 같은 연구기관에서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드러나 재탕 용역이라는 논란이 일고있다.

시는 최근 교통관리실 주도로 대중교통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모두10개의 연구과제를 선정,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과제는 ■교통카드 100% 사용율 달성방안 ■버스 노선 및 운영체계개편방안 ■도심 교통시스템 개편방안 ■향후 10년간 주차장 확충 종합계획 ■상승정체지점 정체원인 분석 및 교통관리 실명제 시행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과제 중 상당수가 그동안 시정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용역 결과물과 유사해 중복 용역의 시비가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도심 교통시스템 개편방안'은 1999년 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가 연구를 마친 '쾌적한 도심을 위한 교통체계 개편방안'과 동일한 주제이다. 또 '버스 노선 및 운영체계 개편방안'은 95년 발표한 '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인 개편방안'과 과제 제목만 다르고, '향후 10년간주차장 확충 종합계획'도 96년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방안 연구'와 겹치는 연구과제이다. 시정개발연구원 이외의 다른 기관 및 학계에서도 이번세 용역과제와 유사한 연구결과물을 이미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재탕·중복 용역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끝났는데도 사업에 활용하지 않다가 새연구과제로 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라며 "기존 연구성과를과제 연구과제를 비교 검토해 최소한 중복 용역은 피해야 한다"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연구과제가 종전 것과 비슷하더라도 교통여건이 급변해 연구방법 및 결과물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각 kimjg@hk.co.kr

3. 뉴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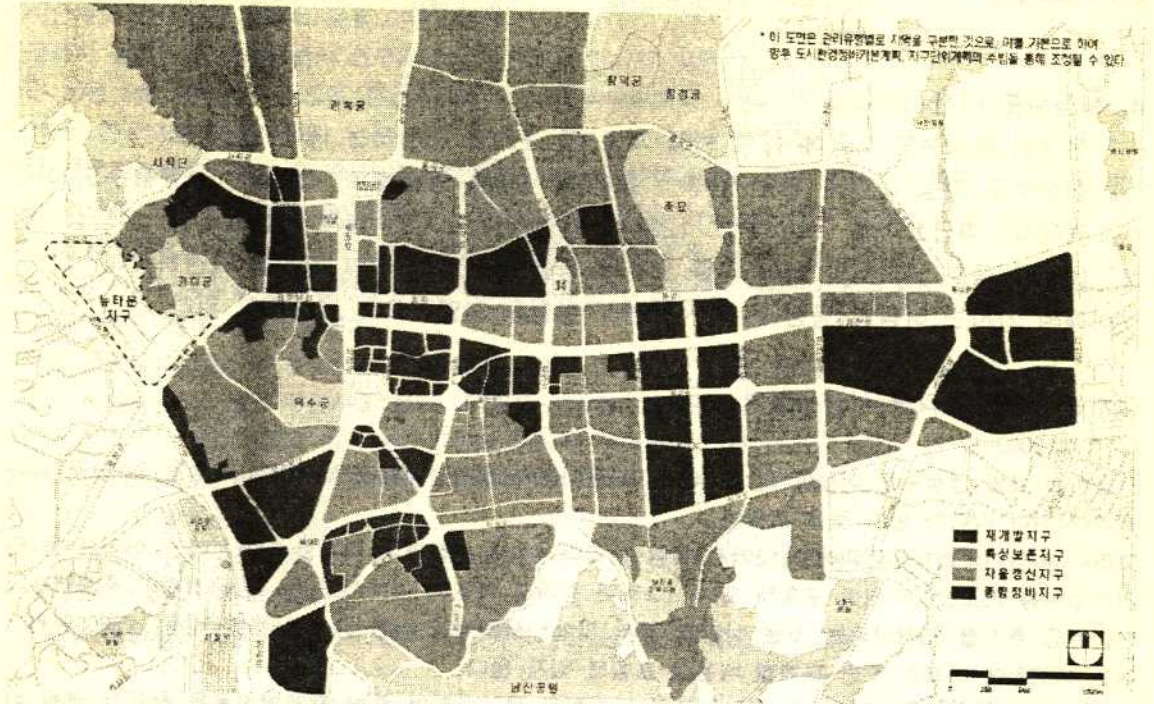
- 주택재개발에 대한 연구는 1996년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이후로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 뉴타운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 집값 급등 이후 강남, 강북의 격차가 사회문제화 되자 '서울시 강남북 경제격차의 현상분석 및 대안연구' (2003) 등이 출간되었다. 강남북 격차를 가져온 원인으로 공공시설의 차이가 지적되자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공공시설 확보방안 연구' (2003),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2004) 등이 나왔다.

- 강남북 격차 해소의 중심에는 뉴타운이 있다. 시정연의 보고서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수행하면서 뉴타운 대상지를 찾아내고, 뉴타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등 뉴타운 관련 다수 용역을 수행하였다.

- 시정연이 작성한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에 서울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증거는 또 있다. 교남뉴타운 지역은 원래 자율갱신지구였으나, 서울시와 재협의 결과 자율갱신지구에서 빠지고 뉴타운 지역으로만 표시되었다.(아래 그림 및 기사 참조)

도심부 지역별 관리유형의 설정



<도심부 발전계획에 따른 지역별 관리유형>

서울시 뉴타운개발 '주먹구구'

[한겨레 2004-06-15]

유적지 있는 교남지역 단계적 자율개발 지정불구 "전면철거 재개발" 물의 서울시가 14일 전면철거해 재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종로구 교남뉴타운 지역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해 수복형 자율갱신 재개발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곳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교남뉴타운 지역은 인근에 경희궁이 있어 역사경관을 보호해야 하는 데다, 상태가 양호한 주택이 많아 지난 2001년 '수복형 자율갱신지구'로 지정한 곳"이라며, "현재 계획대로라면 서울시가 발표한 전면철거식 재개발을 할 수 없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14일 "교남뉴타운 지역에서 80%를 차지하는 단독주택을 모두 없애고 공동주택을 짓는 등, 이 지역을 전면철거형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정연이 다음달 마무리해 발표할 서울시 개발의 큰 틀인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에서도 역시 교남 뉴타운 지역을 '수복형 자율갱신지구'로 분류하고 있다. 교남뉴타운 지역의 재개발 계획을 법적으로 강제할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은 올 10월15일까지 재정비되는데, 상위 체계인 '도심부 발전계획'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가 교남뉴타운 계획을 실행하려면 '도심재개발 기본계획'과 상위 체계인 '도심부 발전계획'을 모두 손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각 지자체마다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한 법정 계획이다. 또 시정연에서는 이지역의 최대 건축물 높이를 50m(12층 안팎)로 제한했지만, 서울시는 20층짜리 건물을 세우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교남 지역을 전면철거형 재개발로 바꾸기로 시정연과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정연에서는 "얼마전 서울시에서 '교남뉴타운'의 계획안을 문서로 보내왔을 뿐, 아직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곧 전면철거형 재개발을 내용으로 한 주민설명회 등을 열 계획이나, 아직 교남뉴타운 개발은 법적인 뒷받침도 안 된 상태여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진 기자 mindle@hani.co.kr

4. 행정수도 이전

- 시정연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 자료 및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앞장섰다.
- '행정수도 기능 이전에 관한 연구 : 동경도 사례를 중심으로' (2003), '행정수도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그 대안' (200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법 제도적 타당성 검토' (2005) 등의 보고서와 함께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시정연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 아래의 기사는 이명박 등장 이후 시정연의 역할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논리에 흔들리는 서울시정연

[한겨레 2002-12-1]

서울시는 15일 행정수도 이전에 최소 54조원이 든다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하 시정연)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강력한 반대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시정연의 연구 결과에는 몇가지 헛점이 있다. 우선 시정연이 제시한 54조원에는 아파트 등 민간건설비용 25조3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의 예에서 보듯, 공공기관의 투자액수에 민간부문 투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서울시가 밝힌 청계천 복원 비용 '3600억원'에는 11조원에 이르는 주변 재개발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명박 시장도 "주변 재개발은 민간부문에서 이뤄질 뉘"이라며 주변 재개발비용을 청계천 복원 비용에 포함하는 것을 비판했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 비용에 민간부문투자까지 포함한 것은 반대를 위한 비용 부풀리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 시정연은 △정부과천청사가 있는 경기지역의 심각한 침체 △교육 사회복지 등 다른 부문 투자 여력 감소 등 부정적인 측면은 최대한 부각한 반면, △비싼 건물값과 임대료 인하로 인한 비용 감소 △교통혼잡비용 절감 등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편익 효과는 철저히 배제했다.

시정연 백용호 원장은 "우선 행정수도 이전에 드는 비용지출과 조달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포괄적인 비용 대비 효과까지 분석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정연의 이번 연구 결과는 대선을 겨냥한 서울시 핵심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시정연의 한 관계자는 "시정연 10년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다" 고 말했다. 실제로 청계천 복원 논란이 지난 6·13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 됐을 때 시정연은 철저히 중립을 지켰다. 시정연은 서울시의 산하 기관이긴 하나, 학술연구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공정성도 있는 법이다. 시정연이 그 금도를 깬 것으로 스스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IV. 기타 지역 연구원

- 1990년 충북지역경제연구소를 효시로 하여 1991년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1992년 서울, 부산, 경남에 개발연구원이 생겨났고, 1994년 강원, 1995년 인천, 경기, 충남에, 1995년 전남개발연구원이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1997년에 제주발전연구원이, 2000년에 울산, 2001년 대전, 2003년 전북발전연구원이 마지막으로 개설됨으로서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14개 독자적인 연구기관을 갖게 되었다(최상철, 2003.9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세미나).

지자체출연 연구기관 붐물 .. 재정상황 천차만별

[한국경제 2002-12-11]

자치단체의 연구기관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설립된 지자체출연의 연구기관은 전국에서 13개에 달한다.

지난 90년 5월 충북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대전이 마지막으로 연구소를 설립해전국의 광역단체가 모두 자체 연구소를 갖췄다.

이들 연구기관들은 지역산업 및 경제 현안에서 부터 도시계획 교통 환경 관광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해 지역 싱크탱크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용역조사 등 중앙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에도 정부출연연구소와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업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자치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독자적인 발전전략 수립에 나서면서 이들연구기관에 대한 관심과 재정지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연구기관 운영보조금으로 서울시는 올해 95억원,경기도 60억원,인천 19억원 등을 지원했다.

그동안 지원을 하지 않던 부산시도 올해 5억원을 지원했고 대구시도 3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연구기관의 위상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발전연구원의 경우 지자체 출연금 1백76억원에 올해 73억원의 지자체 보조를 받고 있으며 자체 자체 청사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기금 97억원에 올해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따라 재정난이 심한 연구원의 경우 연구목적과는 관계없이 별도의 사업을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경남의 경우 매장물센터를 만들어 연간 4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충남과충북도 각각 문화재센터와 충북학연구소 등을 겸해서 운영하고 있다.

대구 경북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부족한 재정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형편이 어려운 연구기관의 경우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97년 설립된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우 6명의 연구원 중 5명이 이직했으며 광주 전남발전연구원도 95년 17명이던 연구원 중 10명이 자리를 옮겼다.

윤식 대구경북개발연구원장은 "지자체출연연구기관은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두뇌사업이란 점에서 좋은 인력의 확보가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이에 걸맞는 투자가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용역을 발주함에 따라 연구의 질적인 저하에 대한 우려도커지고 있다.

연구원 인당 연간 연구과제수에서 인천 3.1건 서울 대구 2.5건 부산 1.9건 등으로 전반적으로 과중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시도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들은 마찰이 빚기도 한다.

광주 전남발전연구원은 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지자체간 마찰을 빚고 있으며 대구 경북개발연구원도 경상북도가 예산지원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

시·도 출연연구원 운영현황

구분	설립일	인력(현 원)					기금출연	세입예산
		총계	연구직			일반직		
			소계	박사	석사			
계	-	399	269	201	69	130	1,375.8	487.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92. 9. 22	90	64	58	6	26	69	111
부산발전연구원	'92. 7. 18	26	16	11	6	10	125	29.1
대구경북개발연구원	'91. 6. 7	27	19	9	10	8	97.2	14.9
인천발전연구원	'95. 8. 18	32	21	15	6	11	100	26.3
광주전남발전연구원	'95. 6. 20	23	12	12	-	11	221	34
전북발전연구원	'92. 2. 10	9	6	6	-	3	-	-
대전발전연구원	'01. 3. 14	13	8	4	4	5	7	9.7
울산발전연구원	'00. 12. 23	20	14	9	5	6	1.7	16.3
경기개발연구원	'95. 1. 20	42	25	25	-	17	214	70
강원발전연구원	'94. 6. 9	26	18	14	4	8	200.9	33
충북개발연구원	'90. 4. 23	17	12	9	3	5	72.5	13.3
충남발전연구원	'95. 4. 14	38	31	10	21	7	122	57
경남발전연구원	'92. 7. 18	25	17	15	2	8	95.5	58.5
제주발전연구원	'97. 7. 6	11	6	6	-	5	50	14.3

(최상철, 2003.9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세미나)

■ 인터넷으로 보는 도시계획

이준호
공간연구집단 연구원

대한민국 인구 10명 중 7명은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시나요? 고스톱을 치기도 하고, 메신저로 친구와 대화하고,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꾸미기. 신문기사 보기. 인터넷 쇼핑하기. 필요한 정보 찾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보화 강국 한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줄 모르면 웬지 세상에 뒤쳐져서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잘 몰라도 불편한 것 하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50대 아저씨께 작년에 나온 H사의 신형자동차에 대해 여쭙보니 그분은 한 시간 동안 끊임없이 그 자동차의 성능,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차가 출시되기 전이었는데도 막힘없이 그 차에 대해서 알고 계시더군요. 이야기 듣고 있는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 많은 지식을 얻은 곳은 신문,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 방송이라고 하십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자동차 부품을 사려면 어디서 싸게 살 수 있는지,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부품이 원인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세 들어 사는 집의 주인 할머니는 일흔이 넘으셨는데 인터넷을 모르셔도 집수리, 벽지도배, 동사무소에 민원신청하기 스스로 해 내십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일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하십니까? 특히 여러분 이 사시는 곳을 변화시키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일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십니까?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구청에서 사는 곳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에 동의하는지 인감을 찍어달라고 할 때 인감을 내주어야 할까요, 말까요. 세 들어 사는 건물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헐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살고 있는 동네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이것저것 구청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구청에 가서 물어보면 담당 공무원들은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부동산 업소에 가도 무어라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재개발 용역 업체 사람들은 재개발이 좋은 것이라고, 혹은 지금 인감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를 본다고 협박 비슷하게 위협을 줍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며 어떻게 해야 할 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이 좋기는 한데 너무나 정보가 많아서 탈입니다. 정보가 많다보니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인터넷 어딘가에 올라와 있는데, 무엇을 어디서 찾기 힘든 것이 인터넷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이 생소한 곳에서 원하는 곳을 가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되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길잡이를 하려 합니다.

앞 강의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이들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 실제 실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항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인터넷에서 완벽하게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면 도시계획에 대해 좀 더 쉽게, 더 많은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참여하시려는 분, 도시계획 관련 사항에 직면하신 분을 위해서 이 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목차>

- 1. 도시계획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
- 2.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도시계획 관련 정보
- 3. 인터넷을 이용한 도시계획 참여
- 4. 도시계획에서 인터넷의 한계 및 개선방향
 - 4.1. 필요한 정보 누락
 - 4.2. 형식적인 시민참여

□ 인터넷으로 얻을 수 있는 도시계획 관련정보

홈페이지	수록 정보명	특이사항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서울시통계, 서울시조례, 서울시예산, 서울시보, 각 부서자료, 토지정보서비스	서울시보: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에 서 추진중인 사업과 이들의 주민열람을 공지함 토지정보서비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관리대상 등의 열람 및 발급 서울시예산: 예산 및 예산집행에 따른 성과 보여줌 각 부서자료: 뉴타운사업, 청계천복원사업 이외 서울 시 각 부서현안 자료 공개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경기도통계, 경기도조례, 경기도예산, 경기도보, 각 부서자료, 부동산정보	부동산정보: 개별공시지가 열람 가능 경기도 지명정보 개편 공개 경기도보: 서울시보와 동일한 성격 경기도예산: 예산 집행 내용 및 결산 공개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	관련 통계자료	인구, 인구이동, 경제활동인구, 사업체수, 종사자수, 보건 및 의료기관 현황, 사회복지시설 현황, 지역총 생산, 학교 및 도서관 등 교육시설 현황
각 시군구 홈페이지	시군구 현안자료	시군구 별 중점현안 위주이며 각 부서 홈페이지는 내용이 부실함 시군구 마다 홈페이지 수록 내용이 차별화되어 있음
각 광역시도 개발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www.sir.re.kr, 경기개발연구원 www.kri.re.kr)	각 연구원 발행 보고서자료	매년 나오는 연구원 보고서 원문 열람 가능(일부 보 고서는 원문보기가 안되며 구입하여야 함)
건설교통부 (www.moct.go.kr)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사업내용,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소관 각 사업 소개, 관련 법제 입안시 입안 내용, 각종 기본계획 수록
법제처 (www.moleg.go.kr)	헌법, 법, 령, 시행규칙	현행법 이외 과거 법령 개정내용 및 개정사유 포함

□ 인터넷으로 가능한 도시계획 참여수단

항목	비고
정책토론펙	각 시도청 홈페이지
인터넷 정보공개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정보공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정보공개
인터넷 민원제기	민원접수 및 관할청 접수 후 처리

통계와 여론조사

임동근
공간연구집단 연구원

« 통계는 신탁이다. »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녁 9시 뉴스에서 경기가 나빠졌다고 말하며 몇몇 숫자를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고, 몇 %, 증가율 얼마, 등등의 말에 뉴스 아나운서의 얼굴이 굳어졌다가 펴졌다가 합니다. 또 보는 사람도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며 근심에 빠지기도, 또 웬지 모르게 기쁘고 합니다. 아주 옛날 서양에서 '신의 목소리'에 자신의 평가와 미래를 듣듯이 오늘날 우리는 언론에 발표되는 '통계 수치'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는 이 통계는 현재를 보여주는 마법상자도 아니고, 또 미래를 예언하는 점쟁이도 아닙니다. 통계는 행정기관들이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것들을 조사해서 숫자로 바꾼 것에 다름 아닙니다. 생각해봅시다. 통계를 만들기 위해 조사하고 정리하고 발표하고, 등등은 모두 돈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그저 공짜로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노력과 돈이 들어가서 나오는 숫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통계를 만들어 발표할까요? 모든 통계에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 이 통계를 만들어서 무엇에 쓰려고 하는가? » 국가가 통계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국가(사람들과 자원들)를 통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통계는 국가가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통계의 큰 틀은 박정희 정권이 만들었습니다. '경제기획원', 중앙정보부와 함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등, 대통령이 바뀌어도 경제기획원과 중앙정보부는 정권을 지탱하는 쌍두마차였습니다. 한쪽에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한쪽에서 돈을 통제하고. 우리나라 통계는 바로 이 '경제기획원'에서 출발합니다. 인구와 주택도 조사하고, 돈과 자원도 조사하고, 등등. 즉, 국가가 사람들을 잘 활용하여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 시작한 것이 통계이고, 오늘날도 그 목적은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는 1983년부터 인구전수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국민의 5% 이상이 국가에 자신의 정보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수조사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 국가가 뭐라고 내 정보를 가져가는가? » 지금껏 우리는 이런 문제제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독일의 이런 사례는 통계가 그렇게 순수하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혹은 사진 찍듯이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은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통계에 매번 반응만 해왔습니다. 국가가 의도적으로 생산하는 숫자들

이 발표되면 이를 해석하고 대응만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한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통계 수치들은 정부가 퍼뜨려주십사하고 언론에 내는 보도자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즉, 여기에 대응하는 것, 이는 이미 정부의 게임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틀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통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통계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의도를 보여주는 통계를 만들어 거꾸로 세상에 알리는 것, 이를 통해 통계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데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 통계와 여론조사 » 본 강의를 통해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듣고 말하는 숫자들에 대하여, 또 여론조사라며 나오는 « 국민 몇 퍼센트 »라는 말이 가진 문제점들을 따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 1 통계란 무엇인가
통계의 목적
통계의 주체
국가통계/사회통계
2. 국가 통계의 분류
전수조사/표본조사
통계의 주기
통계의 내용
3. 국가 통계 보고서 활용방안
통계 간행물
원시자료들
4. 설문(여론조사)
여론조사의 주체
여론조사와 정치
여론조사가 만드는 국민
5. 통계, 여론, 언론
언론의 통계/여론 발표
과학과 통계
6. 우리가 만드는 통계
통계를 만드는 이유
통계 만들기를 위한 조직
통계/여론조사를 사용하는 전략들

1. 국가통계현황

기관별 작성현황

(2005. 9. 1. 현재)

(단위 : 기관, 종)

부 문	작 성 기관수	계	승 인 통 계				
			통계종류		작성방법		
			지정통계	일반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계	137	495	90	405	257	180	58
▶ 정부기관	62	350	75	275	160	145	45
· 중앙행정기관	30	253	59	194	123	113	17
(통계청)	(1)	(53)	(36)	(17)	(42)	(1)	(10)
· 지방자치단체	32	97	16	81	37	32	28
▶ 지정기관	75	145	15	130	97	35	13

부문별 작성현황

(2005. 9. 1. 현재)

(단위 : 종, %)

부 문	작 성 통 계 수		작 성 방 법 별		
	총	구성비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계	495(53)	100.0(100.0)	257	180	58
▶ 인구	27(8)	5.5(15.1)	3	19	5
▶ 고용·임금	29(1)	5.9(1.9)	26	3	-
▶ 물가·가계소비[소득]	16(5)	3.2(9.4)	16	-	-
▶ 보건·사회·복지	84(4)	17.0(7.5)	41	41	2
▶ 환경	22(1)	4.4(1.9)	10	11	1
▶ 농림·수산	46(8)	9.3(15.1)	27	18	1
▶ 광공업·에너지	26(5)	5.3(9.4)	14	9	3
▶ 건설·주택·토지	26(4)	5.3(7.5)	14	10	2
▶ 교통·정보통신	39(1)	7.9(1.9)	16	23	-
▶ 도소매·서비스	9(7)	1.8(13.2)	9	-	-
▶ 경기·기업경영	68(4)	13.7(7.5)	52	3	13
▶ 국민계정·지역계정	11(2)	2.2(3.8)	1	1	9
▶ 재정·금융	18(0)	3.6(0.0)	3	15	-
▶ 무역·외환·국제수지	9(0)	1.8(0.0)	4	3	2
▶ 교육·문화·과학	41(0)	8.3(0.0)	17	21	3
▶ 기타	24(3)	4.8(5.7)	4	3	17

* ()내의 숫자는 통계청 작성통계현황임

2. 여론조사기관 현황 - 박무익(한국갤럽조사연구소장), "우리나라조사사업의 현황과 전망" 중에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기관들을 형태별로 살펴보면, 조사전문회사, 광고 대행사, 대학 내 조사 연구기관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 이를 센서스 형태로 조사해 정확한 통계 수치를 제시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조사전문회사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크고 작은 규모의 조사전문기관의 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필자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상근 직원 5명 이상을 기준으로 한 조사전문회사의 수는 80개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조사전문회사들의 협회 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KOSOMAR)'에 가입된 조사회사는 17개이며, 규모 면에서 직원 수가 30명 이상 되는 전문 조사회사는 8개 정도이다. 업무분야별로 보면 80%가 마케팅조사이며, 사회/정치 조사 10%, 그리고 기타가 10% 정도 된다.

한편 조사 용역비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조사업계에서 규모가 큰 7개 회사의 매출이 500억 원, 기타 조사회사는 약 700억 원으로 전체 총계가 1200억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갤럽의 경우 최근 5년간 조사용역 금액에서 35%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 왔으며, 다른 전문회사들 역시 이와 비슷한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으리라고 추정된다.

2) 광고대행사의 Marketing 조사부

광고대행사의 마케팅 조사부에서도 광고효과 측정,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조사업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마케팅 조사부에 1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광고대행사는 1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광고 대행사의 마케팅 조사부에서는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자체 조사 용역비는 대략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3) 대학 내의 조사 연구기관

현재 사회학과, 신문방송학과, 경영학과, 교육학과, 통계학과 등을 두고 있는 대학 내의 부설 연구소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대학 내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조사 분야는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사회여론조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의 총 조사 용역비 추정은 어렵다.

4) 회사 내의 조사부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에 조사전문기관 등에 외주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회사 내에 자체적인 조사부를 설치해 두고 직접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밀을 요하는 신제품 개발 조사나 유통조사, 소비자 행동 조사 등의 경우는 기업의 직접 조사 부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이러한 직접 조사비는 대략 4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센서스(census) 및 국공립 연구소 등의 연구 프로젝트, 그리고 대학 내 조사연구기관에서 행해지는 조사를 제외하고, 이상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99년 말 현재 국내 조사 용역 시장의 크기를 총 조사비로 추정해 보면 (대략 1900억 원)으로 추정된다

3. 주요 국가통계

- 인구주택총조사
- 산업 총조사
- 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조사
- 농업 총조사
- 어업 총조사
-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인구동태조사
- 국부통계조사
- 가구소비실태조사
- 생활시간조사
- 사회통계조사
- 도·소매업통계조사
- 서비스업 통계조사
- 운수업 통계조사
- 농가경제조사
- 가계조사 (2002년까지는 도시가계조사로 실시)
- 경제활동인구조사
- 건설기성 통계조사
- 지역소득통계

■ 인구주택총조사

- 작성기관
 -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조사과 (전화 : 042-481-2233~2241)
-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 통계의 종류 : 지정, 조사통계
 - ▶ 승인번호 : 인구총조사 제10101호, 주택총조사 제10102호
- 조사목적
 - ▶ 인구의 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
 - ▶ 각종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 조사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영토내에 상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및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처(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거처)
 - ▶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구
 - 해외취업 및 유학중인 자
 - 외국 외교관, 수행원, 공무로 인해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및 그 가족, 국제연합 소속기관 외국직원, 수행원 및 그 가족
 - 국내 주둔 외국군인, 군속 및 그 가족
- 조사주기 및 기간

▶ 주 기 : 5년

▶ 조사기준시점 : 조사당해 연도 11월 1일 0시 (본 기준은 '80년 제12차 조사부터 적용)

▶ 조 사 기 간 : 조사해당 연도 10월29일~11월10일

○ 조사사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 인구에 관한 사항

■ 전수조사항목

- 성명, 본관,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나이, 교육정도, 출생지, 혼인상태

■ 표본조사항목

- 전공분야, 아동보육상태, 1년전 거주지, 5년전 거주지, 컴퓨터 활용상태, 인터넷 활용상태, 개인 휴대용 통신기기, 통근·통학 여부, 통근·통학 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의 지위, 산업, 직업, 현직업 근무년 수, 총 출생아 수, 자녀 거주장소, 생계수단, 주 부양자, 거동 불편여부

▶ 가구에 관한 사항

■ 전수조사항목

- 거처의 종류, 가구구분, 점유형태, 사용방 수, 주거시설 형태, 단독주택 종류, 주인·대표가구 여부

■ 표본조사항목

- 거주기간, 취사연료, 난방시설, 상수도시설, 식수사용형태,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자동차 보유대수, 주차시설, 임차료

▶ 주택에 관한 사항

■ 전수조사항목

- 연건평, 대지면적, 총방수, 건축년도, 편의시설수

○ 조사방법 및 체계

▶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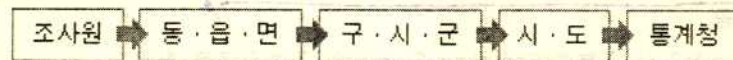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10% 표본조사 병행

■ 해당가구에서 작성 후 제출하거나 임시채용한 조사가원이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 조사 체계

■ 중앙조직 : 통계청장 책임하에 인구주택총조사 전반에 관한 기획, 실사, 자료처리, 분석, 평가업무를 수행

■ 지방조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하에 조사원 추천, 실사지도, 조사표 검토, 회수등 실사업무를 수행



○ 결과공표

▶ 종류

■ 잠정결과

- 조사원이 작성한 가구명부를 기준으로 읍·면·동, 시·군·구, 시·도에서 작성한 집계표를 집계한 것으로 2000년 총조사의 경우 2000년 12월에 공표

■ 전수집계결과

- 모든 가구의 전수조사항목을 집계한 결과로서 2001년 9월(인구부문)과 10월(가구·주택 부문)에 공표

■ 표본집계결과

- 10% 표본가구의 표본조사항목을 집계한 결과로서 1차로 통근통학, 인구이동에 관한 결과를 2001년 12월에 공표, 2차로 산업·직업, 지식정보화, 주거실태, 임차료에 관한 결과를 2002년 4월에 공표

▶ 주 기 : 5년

▶ 간행물명 :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 산업 총조사

○ 작성기관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전화 : 042-481-2141)

○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통계의 종류 : 지정, 조사(전수)통계

▶ 승인번호 : 제 10105호

○ 조사목적

▶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부문에 대한 구조 및 분포와 생산 활동실태를 파악하여 경제정책수립과 각종 표본통계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C.광업」, 「D.제조업」, 「E.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영위하는 종사자수 1인이상의 모든 사업체

○ 조사주기 및 기간

▶ 조사주기 : 5년

▶ 조사대상기간 : 기준년 1.1 ~ 12.31(끝자리가 3, 8자 해당년도)

▶ 조사실시기간 : 익년 5.15 ~ 6.15

○ 조사사항

▶ 종사자 5인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 조사표(1-1)

■ 사업체명 및 소재지 ■ 본사소속 타공장 유무 ■ 본사명 및 소재지 ■ 경영조직

■ 자본금 또는 출자금 ■ 부지 및 건물 연면적 ■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손익·내국소비세 ■ 연간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 유·무형자산

■ 연간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 내역 ■ 주요 생산공정

■ 연간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 재고액 ■ 연간 수원별 용수량

■ 연간 에너지 사용량 ■ 환경오염방지시설 자산 연말잔액

▶ 종사자 4인이하 광업·제조업 사업체 : 조사표(1-2)

■ 사업체명 및 소재지 ■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 부지 및 건물 연면적 ■ 연간 생산비

■ 연간 제품출하액 내역 ■ 연간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 유형자산

■ 주요 원재료명 및 생산공정

▶ 광업·제조업 본사용(1-3)

■ 기업체명 및 소재지

- 사업조직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광업·제조업 사업체(공장·광산) 소재지

■ 경영조직 ■ 자본금 또는 출자금 ■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손익·내국소비세

■ 연간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 유·무형자산 ■ 재고액

▶ 전기업 : 조사표(II)

■ 사업체명 및 소재지 ■ 사업체구분 ■ 종사자수 ■ 연간 급여액 ■ 연간 주요전력량

■ 연간 판매전력량 및 판매수입액 ■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연간 증기생산 및 판매 ■ 유형자산 연말잔액

▶ 가스업 : 조사표(III)

■ 사업체명 및 소재지 ■ 종사자수 ■ 연간 급여액 ■ 배관시설 ■ 재고량 및 재고액

■ 연간 생산량 ■ 연간 판매량 ■ 연간 판매수입액 ■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유형자산 연말잔액

▶ 증기 및 온수공급업 : 조사표(IV)

■ 사업체명 및 소재지 ■ 종사자수 ■ 연간 급여액 ■ 배관시설 ■ 연간 생산량

■ 연간 판매량 ■ 연간 판매수입액 ■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유형자산 연말잔액

▶ 수도사업 : 조사표(V)

■ 수도사업 관할 기관 ■ 종사자수 ■ 연간 급여액 ■ 연간 공급량 ■ 연간 수입액

■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유형자산 연말잔액

○ 조사방법 및 체계

▶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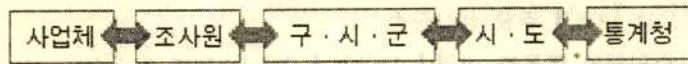
■ 광업, 제조업

-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며, 대규모 사업체는 응답자가 직접 작성함

■ 전기업·가스업·수도사업

- 우편조사

▶ 조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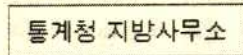


○ 결과공표

▶ 주 기 : 5년

▶ 집계단위 : 산업분류(대·중·소·세·세세분류) 및 지역(시·도, 시·군·구)별

▶ 간행물명 : 「산업총조사 보고서」



■ 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조사

○ 작성기관

▶ 통계청 경제통계국 서비스업통계과 (전화 : 042-481-2182, 2183)

○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통계의 종류 : 지정통계, 조사(전수)통계

▶ 승인번호 : 제10108호

○ 조사목적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산업구조변화, 경영실태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각종 정책수립, 민간기업의 기업경영계획수립,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및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표본을 제공

○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 대분류 G 도·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J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

▶ 조사대상처 : 약 210만개 사업체

○ 조사주기 및 기간

▶ 조사주기 : 5년

▶ 조사대상기간 : '01. 1. 1 ~ 12.31

▶ 조사실시기간 : '02. 4. 8 ~ 4.27

○ 조사사항

▶ 공통조사항목(10개 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사업체 변동 및 창설년월,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자본금 또는 출자금, 연간매출액

▶ 특성항목(8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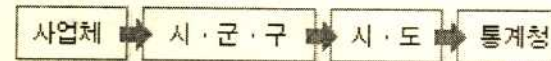
■ 사업실적, 납부부가가치세, 사업체 건물 면적, 정보기술 기반 및 활용,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객실(석)수

○ 조사방법 및 체계

▶ 조사방법

■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대규모 사업체는 자기 기입식 조사 병행

▶ 조사체계



○ 결과공표

▶ 주 기 : 5년

▶ 집계단위 :

■ 전국 : 산업세세분류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경비 등

■ 시도별 : 산업세(세세)분류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경비 등

■ 구시군별 : 산업소분류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경비 등

▶ 간행물명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보고서

■ 농업 총조사

○ 작성기관

▶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수산통계과 (전화 : 042-481-2292)

○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통계의 종류 : 지정, 조사통계

▶ 승인번호 : 제10141호

○ 조사목적

- ▶ 농가수, 농가인구수 등 농촌지역의 구조와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읍면단위까지 세분화된 지역자료를 생산함으로써
 - ▣ 농업에 관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 동 부문의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연구·분석자료로 활용
 - ▣ 농업관련 통계조사를 위한 표본틀(Sample frame)제공

○ 조사대상

- ▶ 조사시점을 기준하여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내의 모든 개인 농가

○ 조사주기 및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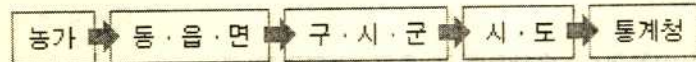
- ▶ 조사주기 : 10년(서력 끝자리 「5」 자년도에 간이조사)
- ▶ 조사기준시점 : 조사당년 12. 1. 0시 현재
- ▶ 조사대상기간 : 조사전년 12. 1~당년 11.30(1년간)
- ▶ 조사실시기간 : 조사익년 3.5 ~3.16(12일간)

○ 조사사항

- ▶ 농가에 관한 사항
 - ▣ 전·겸업별, 영농형태별, 행정구역별 등
- ▶ 농가인구에 관한 사항
 - ▣ 가구원, 관계, 연령, 성별, 교육, 농사종사기간, 주 종사분야 등
- ▶ 농경지에 관한 사항
 - ▣ 논 면적(이모작 논, 경지정리된 논, 수리불안전 논), 밭면적·과수원 면적, 수확면적, 수확 여부, 시설면적, 시설내 재배작물별 면적 등
- ▶ 농축산에 관한 사항
 - ▣ 축종별 마리수, 농축산물 판매액,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농사, 판매방법
- ▶ 기타 농기계 보유대수, 논벼 영농방법, 친환경농업실천, 컴퓨터 보유, 주거환경, 향후 영농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조사방법 및 체계

- ▶ 조사방법
 - ▣ 일용조사원이 조사구내의 모든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타계식 면접조사
- ▶ 조사체계



○ 결과공표

- ▶ 주 기 : 10년
- ▶ 집계단위 : 전국 및 시·도별(시·군, 읍·면)
- ▶ 간행물명 : 『농업총조사보고서』 (전국편 1권, 지역편 10권으로 편제)

■ 어업·총조사

○ 작성기관

- ▶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수산통계과(전화 : 042-481-2292)

○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 통계의 종류 : 지정, 조사통계

- ▶ 승인번호 : 제10146호

○ 조사목적

- ▶ 전국의 모든어가를 대상으로 어업의 경영구조와 어가인구의 취업상황 및 생활상태 등을 파악하여
- ▶ 어업정책 수립·평가 및 국가경제 주요지표의 작성
 - ▣ 어업관련 학술연구 및 각종 어업통계 개선을 위한 모집단 자료 확보
 - ▣ 국제간 자료 교류 및 분석을 통한 어업부문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조사대상

- ▶ 조사시점을 기준하여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내의 모든 개인 어가

○ 조사기준 시점 및 조사기간

- ▶ 조사주기 : 10년(서력 끝자리 「5」 자 년도에 간이조사)
- ▶ 조사기준시점 : 조사기준 당년 12.1일 0시 현재
- ▶ 조사대상기간 : 조사전년 12.1~조사기준년 11.30(1년간)
- ▶ 조사실시기간 : 조사익년 3.5~3.16(12일간)

○ 조사사항

- ▶ 어가에 관한 사항
 - ▣ 전·겸업별, 어업형태별, 행정구역별
- ▶ 어가인구에 관한 사항
 - ▣ 가구원, 관계, 연령, 성별, 교육, 어업 종사기간, 주 종사분야 등
- ▶ 어로어업에 관한 사항
 - ▣ 어업별 어업종류, 조업수역, 주된 어획어종
- ▶ 양식어업에 관한 사항
 - ▣ 양식 어종별 양식방법 및 양식장 면적
- ▶ 수산물에 관한 사항
 - ▣ 주된 상품형태, 판매처, 판매금액
- ▶ 기타 보유어선 척수, 컴퓨터 보유, 주거환경 등

○ 조사방법 및 체계

- ▶ 조사방법
 - ▣ 일용조사원이 조사구내의 모든 어가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 ▶ 조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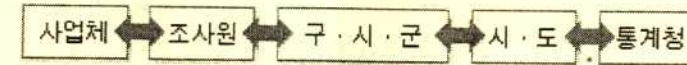
○ 결과공표

- ▶ 주 기 : 10년
- ▶ 집계단위 : 전국 및 시·도별(시·군·읍·면)
- ▶ 간행물명 : 『어업총조사보고서』 (전국편 2권, 지역편 3권 총 5권으로 편제)

■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 작성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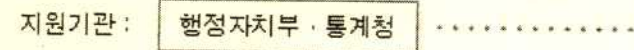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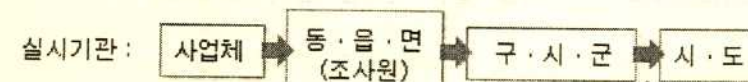
-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전화 : 042-481-2141)
-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 통계의 종류 : 지정, 조사통계
 - ▶ 승인번호 : 제10109호
- 조사목적
 - ▶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및 생산활동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경제정책수립 및 광공업 부문의 각종 표본통계 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 조사대상
 -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C.광업」, 「D.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여 조사기준년도말 현재 종사자 5인 이상 이거나 조사기준년도의 조사기간 중 월평균 종사자수가 5인 이상 사업체
- 조사주기 및 기간
 - ▶ 조사주기 : 매년(끝자리가 3, 8자연도는 산업총조사 실시)
 - ▶ 조사대상기간 : 기준년 1.1 ~ 12.31
 - ▶ 조사실시기간 : 익년 5.15 ~ 6.15
- 조사사항
 - ▶ 광업·제조업 공장용 : 조사표(Ⅰ)
 - 사업체명 및 소재지 ■ 본사소속 타공장 유무 ■ 본사명 및 소재지 ■ 경영조직
 - 자본금 또는 출자금 ■ 부지 및 건물 연면적 ■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손익·내국소비세 ■ 연간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 유·무형자산 ■ 연간 제품출하액(매출액) 및 재고액 내역 ■ 주요 생산공정
 - 연간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 재고액
 - ▶ 본사용 : 조사표(Ⅱ)
 - 기업체명 및 소재지
 - 관할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광업·제조업 사업체(공장·광산) 소재지
 - 경영조직 ■ 자본금 또는 출자금 ■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손익·내국소비세
 - 연간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 유·무형자산 ■ 재고액
- 조사방법 및 체계
 - ▶ 조사방법
 - 광업, 제조업
 -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며, 대규모 사업체는 응답자가 직접 작성함
 - ▶ 조사 체계
 - 지방행정기관 체계



- 결과공표
 - ▶ 주 기 : 1년
 - ▶ 집계단위 : 산업분류(대·중·소·세·세세분류) 및 지역(시·도, 시·군·구)별
 - ▶ 간행물명 :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보고서」

■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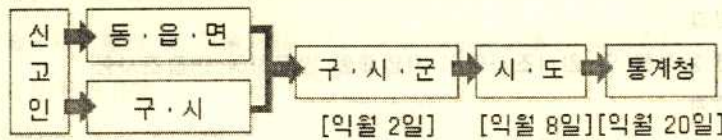
- 작성기관
 -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전화 : 042-481-2136)
-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 통계의 종류 : 지정, 조사(전수)통계
 - ▶ 승인번호 : 제10137호
- 조사목적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의 모집단을 제공하는데 있음
- 조사대상
 -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농림(개인경영), 어업(개인경영),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사업체(약 300만개)
- 조사주기 및 기간
 - ▶ 조사주기 : 매년(12월 31일 기준)
 - ▶ 조사기준일 : 전년 12월 31일
 - ▶ 조사대상기간 : 전년 1.1 - 12.31
 - ▶ 조사실시기간 : 매년 2-4월중 1개월간 실시
- 조사사항
 - ▶ 사업체명 ▶ 대표자명 ▶ 소재지 ▶ 조직형태 ▶ 사업체 구분 ▶ 사업장 변동
 - ▶ 사업의 종류 ▶ 종사자수
- 조사방법 및 체계
 - ▶ 조사방법
 - 읍·면·동직원 및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조사함
 - ▶ 조사체계



- 결과공표
 - ▶ 주 기 : 1년
 - ▶ 집계단위 : 전국 및 시·도별
 - ▶ 간행물명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인구동태조사

- 작성기관
 -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전화 : 042-481-2368, 2502, 2257)
-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 통계의 종류 : 지정통계
 - ▶ 승인번호 : 제10103호
- 조사목적
 - ▶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변동 요인이 되는 사항에 관한 통계로서 인구·경제·사회·교육·보건 등의 각종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역내 뿐만아니라 외국에 거주하는 본국인도 포함
- 조사주기 및 기간
 - ▶ 조사주기 : 매월
 - ▶ 조사대상기간 : 매년 1. 1. ~ 12. 31.
- 조사사항
 - ▶ 출생 : 신고연월, 현주소, 성별, 혼인중 외, 출생연월, 출생장소, 부모의 생년월일, 부모의 직업, 부모의 최종졸업학교, 부모의 결혼연월, 임신주수, 다태아여부, 출생순위, 신생아체중, 모의 출산아수(18개 항목)
 - ▶ 사망 : 신고연월, 현주소, 성별, 주민등록번호, 사망연월, 사망장소, 발병(사고발생)당시 직업, 사망원인 진단자, 혼인상태, 사망자의 최종졸업학교, 사망종류, 사고발생장소, 사고내용, 사망원인, 발병(사고발생)부터 사망까지 기간(15개항목)
 - ▶ 혼인 : 신고연월, 남편처의 본적 및 현주소, 남편처의 주민등록번호, 실제결혼연월, 남편처의 직업 및 최종졸업학교, 남편처의 혼인종류(14개 항목)
 - ▶ 이혼 : 신고연월, 남편처의 본적 및 현주소, 남편처의 주민등록번호, 실제결혼연월, 실제이혼연월, 20세 미만 자녀수, 이혼의 종류 및 사유, 남편처의 최종졸업학교, 직업(16개 항목)
- 조사방법
 - ▶ 조사방법
 - ▶ 신고의무자가 신고서(호적 및 인구동태신고 공통 용지)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법정기한 내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구(동)·시(동)·읍·면에 제출
 - ▶ 조사체계



- 결과공표
 - ▶ 주기 : 1년
 - ▶ 집계단위 : 전국 및 시·도별
 - ▶ 간행물명 :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국부통계조사

- 작성기관
 - ▶ 통계청 경제통계국 통계분석과 (전화 : 042-481-2217)
 - ▶ 통계청, 농림부, 산림청 등이 각 부문별로 실시

-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 통계의 종류 : 지정, 조사통계
 - ▶ 승인번호 : 제10110호
- 조사목적
 - ▶ 국민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부의 존재량을 조사하여 경제적 국력을 파악하는 한편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자본계수를 산출하여 부의 분포 및 구성을 파악함으로써 경제개발계획, 국토건설계획 등의 제반 경제정책 입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 조사대상
 - ▶ 자산
 - ▶ 국민경제내에 소재하는 재생산 가능한 유형고정자산(가계자산포함), 재생산 불가능 자산 중 토지, 임목, 채고자산, 대외순자산
 - ▶ 대상기관 : 국내에 소재 또는 거주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기업 및 일반가구 등으로 이를 자산의 소유 주체별로 세분하면 다음과 같음
 - ▶ 정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 법인 : 상법상의 영리법인과 민법,특별법상의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 개인기업 : 개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개인기업
 - ▶ 비영리단체 ▶ 일반가구 ▶ 대외순자산
- 조사주기 및 기간
 - ▶ 조사주기 : 10년
 - ▶ 조사기준 : 1997. 12. 31
 - ▶ 조사실시기간 : 1998. 3 ~ 10월(8개월간)
- 조사방법 및 체계
 - ▶ 조사방법
 - ▶ 부문별조사방법
 - ▶ 정부자산부문은 전수조사, 자계식조사이며 1,600 기관을 대상
 - ▶ 법인자산부문은 표본조사, 자·타계식이며 25,000 업체를 대상
 - ▶ 개인기업자산 부문은 표본조사, 자·타계식이며 60,600 업체를 대상
 - ▶ 가계자산부문은 표본조사, 타계식이며 5,000 가구를 대상
 - ▶ 대외순자산부문은 기존자료로 추계함
 - ▶ 조사 체계
 - ▶ 부문별로 5개 기관이 분담 조사
 - ▶ 통계청 :
 - ▶ 국부추계 총괄
 - ▶ 각종 평가표의 기준 설정
 - ▶ 법인기업자산, 개인기업자산(농림부문제외), 정부자산, 가계자산의 표본조사, 토지자산 간접추계
 - ▶ 농림부 :
 - ▶ 개인기업중 농업부문자산 표본조사
 - ▶ 산림청 :
 - ▶ 개인기업중 임업부문자산 표본조사
 - ▶ 임목자산 간접추계
 - ▶ 협조기관 : 한국은행, 한국감정원

○ 결과공표

- ▶ 주 기 : 10년
- ▶ 집계단위 : 16개 시도
- ▶ 간행물명 : 『국부통계조사보고서』(제 1 권 종합편, 제 2 권 정부 자산편, 제 3 권 법인기업자산편, 제 4 권 개인기업자산편, 제 5 권 가계자산편)

■ 가구소비실태조사

○ 작성기관

-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복지통계과 (전화 : 042-481-2361)

○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 통계의 종류 : 지정, 조사통계
- ▶ 승인번호 : 제10129호

○ 조사목적

- ▶ 소규모 표본조사인 도시가계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1인 가구와 16개 시도별 자료의 범위를 포함하여 가구소득 분포 및 소비수준, 가구 내구재 보유현황과 저축, 부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가계실태를 파악 하여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 자료 제공과 각종 경제, 사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 ▶ 조사범위 : 전국의 표본조사구내에 있는 약 27,000가구
- ▶ 조사대상 : 조사기간을 기준으로 표본조사구내의 정상적인 가계수지 파악이 가능한 가구, 단, 아래의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2인 이상 가구 :
 - 음식점, 여관, 하숙업을 경영하는 겸용주택내의 가구
 - 영업상 고용한 종업원이 2인이상 동거하는 가구
 - 외국인 가구 • 비혈연 집단 가구
 - 1인 가구 :
 - 15세 미만인 자 • 사회시설에 있는 자 •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 음식점, 여관, 하숙업을 경영하는 겸용주택내의 가구 • 외국인가구

○ 조사주기 및 기간

- ▶ 조사주기 : 5년
- ▶ 조사기간 : 2001. 5. 7~5.18(12일간)
- ▶ 조사대상기간
 - 지출 및 소득 : 2000. 1. 1~12. 31
 - 가구내구재, 저축·부채·부동산 : 2000. 12월말 현재

○ 조사사항

- ▶ 가구에 관한 사항
 - 가구원 및 주거 등 가구의 일반사항(4개 항목)
 - 총가구원 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사항, 거처구분, 주거전용면적
 - 지출관련 항목(5개 항목)
 - 소비지출, 타 가구 송금보조, 조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기타세금), 지급이자, 소득세·연금기여금·사회보험료(개인별 조사표 항목)

■ 가구내구재(1개 항목)

- 주요 가구내구재 보유수량 및 연도별 구입수량

■ 저축 및 부채관련 항목(2개 항목)

- 저축항목별 적립/불입/투자금 총액, 차입방법별 부채

■ 부동산관련 항목(3개 항목)

- 입주형태별 부동산 평가액, 현 거주 주택이외의 부동산 소유여부 및 평가액, 임대보증금 여부 및 금액

■ 소득관련 항목(27개 항목)

- 근로 및 사업소득(사업소득, 농림축어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 가구원에 관한 사항

- 성 별 ■ 연 령 ■ 교육정도 ■ 배우관계 ■ 산업 ■ 직업

▶ 주거에 관한 사항

- 거처의 종류 ■ 사용면적

▶ 가계지출에 관한 사항

- 지출의 품명, 지출금액

▶ 가구내구재에 관한 사항

- 소유품목명 ■ 소유수량 ■ 연도별 구입수량

▶ 연간소득에 관한 사항

- 가구원별로 소득종류에 따른 연간소득 ■ 가구당 소득종류에 따른 연간소득

▶ 저축·부채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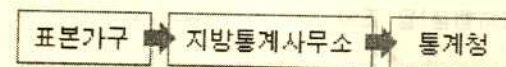
- 저축항목별 저축액 및 차입방법별 부채액 ■ 부채용도별 부채잔액

○ 조사방법

▶ 조사방법

- 가구원 및 주거에 관한 사항, 지출, 가구내구재, 저축·부채 및 부동산 관련 항목 등은 가구대표자 또는 조사내용을 잘 응답할 수 있는 가구원에게 질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고, 소득관련 항목은 가구의 15세이상 가구원에게 각각 질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표를 가구에 배부하여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자기 기입식 방법을 병행

▶ 조사체계



○ 결과공표

- ▶ 주 기 : 5년
- ▶ 집계단위 : 전국, 16개 시도별
- ▶ 간행물명 : 『2000 가구소비실태조사 보고서』
 - 제1권 2인이상 가구편 ■ 제2권 1인 가구편

■ 생활시간조사

○ 작성기관

-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복지통계과 (전화 : 042-481-2361)
-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 통계의 종류 : 지정통계
 - ▶ 승인번호 : 제10152호
- 조사목적
 - ▶ 국민소득 증가, 법정근로시간 감소, 토요일무제 확산 등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와 여가활동시간이 확대되면서 국민의식도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에서 건강, 사회참여, 오락·여가·레저활동 등과 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위욕구로 변화되고 있음
 - ▶ 산업 및 고용구조가 다양화되고 가사노동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취업유형과 노동시간, 무보수 가사노동량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인력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 국민의 삶의 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시간적으로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이 조사의 중요성이 매우 큼
 - ▶ 생활시간조사는 1920년대에 유럽에서 조사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독일, 스웨덴,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0개국 이상에서 조사하고 있음
 - ▶ 생활시간조사의 기대효과
 - 합리적 고용정책의 수립 ■ 삶의 질에 대한 국제적 비교기준 제시
 - 건전한 여가문화의 정착유도 ■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평가 및 제도적 반영
- 조사대상 및 표본규모
 - ▶ 경상표본조사구를 활용하여 표본크기 결정
 - ▶ 17,000가구의 10세이상 가구원 약 48천명을 조사대상으로 함
- 조사기간
 - ▶ 본조사 : '99년 9월 2일~14일(13일간)
- 조사주기
 - ▶ 5년
- 조사항목(30)
 - ▶ 가구관련사항
 - 주택의 종류, 입주형태, 주거전용면적, 자가용 보유여부, 미취학 자녀 보육 형태등
 - ▶ 개인관련사항
 -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의 개인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 휴무제도, 시간부족느낌 등
 - ▶ 시간일지(time-diary) : 하루 24시간의 활동형태와 그에 따른 시간 사용량
 - 10분 간격으로 행동내용(주된행동 및 동시행동)을 조사
 - 장소(집 안,밖), 이동 수단 조사
- 조사방법
 - ▶ 가구관련사항과 개인관련사항은 조사원이 면접조사
 - ▶ 시간일지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계식 조사
- 조사주체
 - ▶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과
- 추진일정
 - ▶ 종합실시계획안 수립(99. 7월)
 - ▶ 조사준비
 - 관련기관 및 이용자 의견수렴(99. 3월)

- ▶ 전문가 자문회의 (99. 4)
- ▶ 시범예행조사 (99. 5월)
- ▶ 조사표, 결과표 및 조사요령서 작성(6월)
- ▶ 실지조사
- ▶ 조사관련자료 유인 배부 (99. 8월)
- ▶ 임시조사원 채용·교육 (99. 8월)
- ▶ 본조사 (99. 9월)
- ▶ 조사표류 내용검토, 정리 및 제출 (99. 10월)
- ▶ 조사표류 사전내검 (99. 10월~11월)
- ▶ 조사결과의 처리
 - 자료처리 및 심사요령서 작성 (99. 12월)
 - 자료입력, 에디팅 및 자료보완 (2000. 1~5월)
 - 결과 분석 및 공표 (2000. 6~9월)
 - 보고서 발간 (2000. 12월)
- 결과공표
 - ▶ 주기 : 5년
 - ▶ 간행물명 : 『생활시간조사보고서』
 - 제1권 생활시간량편 ■ 제2권 시간간격별 행위자 비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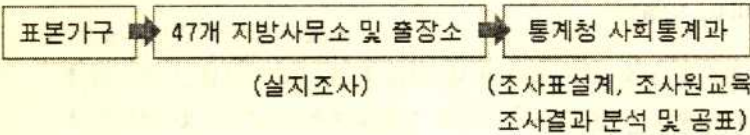
■ 사회통계조사

- 작성기관
 -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복지통계과 (전화 : 042-481-2274)
-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 통계의 종류 : 지정, 조사통계
 - ▶ 승인번호 : 제10118호
- 조사목적
 - ▶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 조사대상
 - ▶ 전국 약 30,000표본가구내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각 조사부문에 따라서 조사대상이 다를 수 있음)
- 조사주기 및 기간
 - ▶ 조사주기 : 연간(조사부문별 조사주기는 4년)
 - ▶ 조사기간 : 9월15일이 낀 주간 다음 10일간
- 조사사항
 - ▶ 기본사항과 각 부문별 주요관심항목을 중심으로 매년 바꾸어 조사함
 - ▶ 기본사항 :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배우관계, 지난 1주간 활동 상태,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 ▶ 부문별 주요조사사항
 - 가 족 : 노후준비방법,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등
 - 소득·소비 : 소득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건축 소비지출항목 등
 - 노 동 : 근로여건 만족도, 직업선택 요인,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 등

- ▶ 교육 : 자녀교육의 목적, 교육기회 미 충족이유 등
- ▶ 보건 : 건강관리방법,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이유 등
- ▶ 주거·교통 : 원하는 주택형태, 통근·통학 소요시간 등
- ▶ 정보·통신 : 정보통신기기 보유, PC사용능력, 사용용도, 사용시간 등
- ▶ 환경 :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환경오염 정도평가 등
- ▶ 복지 : 관심있는 조사항목 선정중임
- ▶ 문화·여가 : 신문구독빈도 및 관심분야, 여가활용방법, TV시청시간 등
- ▶ 안전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야간보행시 안전도 등
- ▶ 사회참여 : 주관적 계층의식, 사회문제에 대한 견해, 사회적 이동에 대한 태도 등

○ 조사방법

- ▶ 조사방법
 - ▶ 면접타계식 조사
- ▶ 조사체계



○ 결과공표

- ▶ 주기 : 1년
- ▶ 집계단위 : 전국편은 각 항목의 특성에 맞게 동·읍·부, 성, 연령, 교육정도, 직업, 산업, 중사상의 지위별로, 지역편(시도)은 성, 연령, 교육정도, 직업별로 집계
- ▶ 간행물명 :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도·소매업통계조사

○ 작성기관

- ▶ 통계청 경제통계국 서비스업통계과 (전화 : 042-481-2186, 2187)

○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 통계의 종류 : 지정, 조사(표본)통계
- ▶ 승인번호 : 제10126호

○ 조사목적

- ▶ 도·소매업사업체에 대한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 수립과 연구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조사대상

-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G. 도매 및 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 ▶ 조사대상처 : 25,000개 사업체

○ 조사주기 및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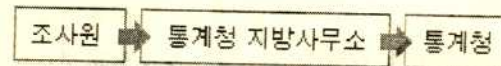
- ▶ 조사주기 : 1년
- ▶ 조사대상기간 : 전년도 1. 1 ~ 12. 31(1년간)

○ 조사사항

- ▶ 사업체명 및 소재지 ▶ 사업내용 ▶ 조직형태 ▶ 1일 평균 영업시간
- ▶ 사업체 정기휴무일수 ▶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 사업체 건물 연면적
- ▶ 사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 등) ▶ 납부부가가치세 ▶ 임대료 수입
- ▶ 판매관리기기 보유대수 ▶ 객실(석) 수 ▶ 객실수입료(호텔업만)

○ 조사방법 및 체계

- ▶ 조사방법
 - ▶ 지방통계사무소 조사담당 직원에 의한 면접조사 (대규모 사업체는 자기 기입식조사 병행)
- ▶ 조사체계



○ 결과공표

- ▶ 주 기 : 1년
- ▶ 집계단위 : 16개 시·도별 산업소분류별
- ▶ 간행물명 : 「도·소매업통계조사 보고서」

■ 서비스업 통계조사

○ 작성기관

- ▶ 통계청 경제통계국 서비스업통계과 (전화 : 042-481-2186, 2187)

○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 통계의 종류 : 지정, 조사(표본)통계
- ▶ 승인번호 : 제10127호

○ 조사목적

- ▶ 서비스업 사업체에 대한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 수립 및 관련 분야의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R.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 조사대상처 : 약 25,000개 사업체

○ 조사주기 및 기간

- ▶ 조사주기 : 1년
- ▶ 조사대상기간 : 전년도 1. 1 ~ 12. 31(1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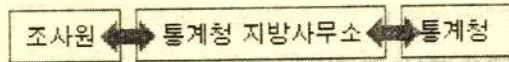
○ 조사사항

- ▶ 사업체명 및 소재지 ▶ 사업내용 ▶ 조직형태 ▶ 1일 평균 영업시간
- ▶ 사업체 정기휴무일수 ▶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 사업체 건물 연면적
- ▶ 사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 등) ▶ 납부부가가치세 ▶ 직능별 종사자수(중분류 72만)
- ▶ 전산장비보유대수(중분류 72만)

○ 조사방법 및 체계

- ▶ 조사방법
 - ▶ 지방통계사무소 조사담당 직원 및 임시조사원이 조사대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대규모 사업체는 자기 기입식 조사방법 병행)

▶ 조사체계



○ 결과공표

- ▶ 주 기 : 1년
- ▶ 집계단위 : 16개 시·도별, 산업소분류별
- ▶ 간행물명 : 『서비스업통계조사 보고서』

■ 운수업 통계조사

○ 작성기관

▶ 통계청 경제통계국 서비스업통계과 (전화 : 042-481-2201, 2202)

○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 통계의 종류 : 지정, 조사통계
- ▶ 승인번호 : 제10119호

○ 조사목적

▶ 운수업 분야의 구조변동 및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1 운수업」을 조사대상으로 함(약 283천여개)

○ 조사주기 및 기간

- ▶ 조사주기 : 매년
- ▶ 조사대상기간 : 전년 1. 1 ~ 12. 31
- ▶ 조사실시기간 : 매년 4. 20 ~ 5. 19 (1개월간)

○ 조사사항

- ▶ 일반사항 : 사업체개황, 조직형태, 사업형태, 장비대수, 종사자수
- ▶ 결산사항 : 자본금, 급여액, 수입, 비용, 납부부가가치세, 유형고정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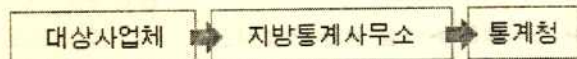
○ 조사방법 및 체계

▶ 조사방법

▶ 육상, 항공, 수상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은 통계청 지방통계사무소의 조사 담당직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버스 및 회사택시 업체는 각 시·도 버스 및 택시 조합을 통한 자기 기입조사로 실시

▶ 조사체계

▶ 지방통계사무소 조사분



▶ 조합조사분



○ 결과공표

- ▶ 주 기 : 매년

▶ 집계단위 : 전국 및 시·도

▶ 간행물명 : 『운수업통계조사 보고서』

■ 농가경제조사

○ 작성기관

▶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수산통계과(전화 : 042-481-2301~7)

○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 통계의 종류 : 지정, 조사통계
- ▶ 승인번호 : 제10142호

○ 조사목적

▶ 농가경제 구조 및 경영실태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농가소득, 소비수준, 노동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 동 부문의 소득추계 및 소비구조 분석자료로 활용
- ▶ 농업부문의 학술연구 및 경영계획 수립, 분석, 평가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 조사대상가구 : 3,200 표본가구
- ▶ 2000년 농업총조사 결과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농가 (단독가구, 상시고용인 5인이상 기업농, 시험장, 학교 등은 제외)

○ 조사주기 및 기간

- ▶ 조사주기 : 매월
- ▶ 조사대상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조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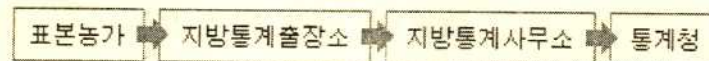
- ▶ 인적사항 : 경영주, 경영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노동능력, 취업상황, 주업상황, 교육정도
- ▶ 주요항목 : 농업총수입, 농업경영비, 농업수지, 경영수지, 농가소득, 가계지출, 농가자산 및 부채 등 농가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수입과 지출을 복식부기 원리로 조사

○ 조사방법 및 체계

▶ 조사방법

▶ 일계부 조사는 조사대상가구에서 매일매일 직접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장 능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조사담당자에 의한 면접조사 방법에 따름

▶ 조사체계



○ 결과공표

- ▶ 주 기 : 연간
- ▶ 집계단위 : 전국 및 도별
- ▶ 간행물명 : 『농가경제통계』

■ 가계조사 (2002년까지는 도시가계조사로 실시)

○ 작성기관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복지통계과 (전화 : 042-481-2280)

○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 통계의 종류 : 지정, 조사통계
- ▶ 승인번호 : 제10106호

○ 조사목적

- ▶ 전국 전가구의 생활수준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함으로써
 - 국민소비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에 필요한 가중치 기초자료
 - 추계의 기초자료 ■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 대책비 산정자료
 - 국민주택 공급대상의 기준설정 자료 ■ 각종 경제, 사회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조사대상

- ▶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인 이상 가구중 약 7,50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함. 단, 조사대상으로 적합치 못한 다음 가구는 제외
 - 농·어·가 ■ 음식점, 여관, 하숙업을 경영하는 겸용주택가구
 - 영업상 사용인이 2명 이상 동거가구 ■ 비혈연 자취가구
 - 단독가구 ■ 외국인가구

○ 조사주기 및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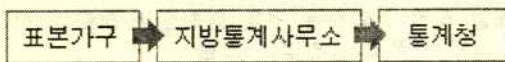
- ▶ 조사주기 : 매월
- ▶ 조사대상기간 : 매월 1일 ~ 말일

○ 조사사항

- ▶ 가구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 ▶ 가구주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
- ▶ 가구원에 관한 사항
- ▶ 주거에 관한 사항

○ 조사방법 및 체계

- ▶ 조사방법
 - 가계부 기장방식에 의하여 조사함. 즉 조사개시전에 조사표(가계부)를 표본가구에 배부하면 대상가구에서 매일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그 금액과 품목을 가계부에 기장함.
- ▶ 조사체계



○ 결과공표

- ▶ 주 기 : 분기, 연
- ▶ 집계단위 : 전국, 서울
- ▶ 간행물명 : 『한국통계월보』 (분기), 『도시가계연보』 (년)

■ 경제활동인구조사

○ 작성기관

-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복지통계과 (전화 : 042-481-2266)

○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 통계의 종류 : 지정, 조사통계

- ▶ 승인번호 : 제10104호

○ 조사목적

- ▶ 취업, 실업, 노동력 등과 같은 인구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노동공급, 노동투입,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정도 파악, 고용 창출 등을 위한 정부정책 입안 및 평가자료 제공

○ 조사대상

- ▶ 조사대상가구 : 약 33,000 표본가구
- ▶ 조사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인구 중 만15세이상인 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
 -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 전투경찰
 -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 외국인

○ 조사주기 및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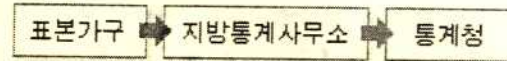
- ▶ 조사주기 : 매월
- ▶ 조사대상기간 :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
- ▶ 준비조사기간 : 조사대상기간 전 1주간
- ▶ 실시조사기간 : 조사대상기간 다음주 1주간

○ 조사항목(35)

- ▶ 인적항목 : 가구원 관리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혼인상태
- ▶ 확인항목 : 활동상태, 취업여부,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1주간의 구직 여부, 4주간의 구직여부
- ▶ 세부항목 : 부업 소유여부, 취업시간, 36시간미만 일한 이유, 추가취업 및 전직희망여부, 추가취업 가능여부 및 추가취업 가능 시기, 추가취업 탐색여부, 취업가능성 여부, 구직경로, 구직기간, 희망고용형태, 희망근무형태, 취업제외여부, 미취업 사유, 취업희망유무, 취업가능성여부, 비구직이유, 지난 1년간 구직경험여부 및 최근의 구직 시기, 전직유무 및 이직시기, 이직사유, 산업, 직업·종사자규모, 종사상의 지위, 취업시기, 고용계약여부 및 계속 근무가능여부

○ 조사방법 및 체계

- ▶ 조사방법
 - 지방사무소 조사담당직원이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 ▶ 조사체계



(조사가구방문, 조사 (기계내검, 표내검, 조사표내용 결과 분석 입력, 온라인 전송) 및 공표)

○ 결과공표

- ▶ 주 기 : 매월 고용동향
- ▶ 집계단위 : 전국 및 시·도별
- ▶ 간행물명 : 월별, 분기별 및 연간동향을 분석수록한 『경제활동인구연보』 (Annual Report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및 『경제활동인구월보』 (Monthly Report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 건설기성 통계조사

○ 작성기관

-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동향과 (전화 : 042-481-2168)

○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 통계의 종류 : 일반, 조사(표본)통계
- ▶ 승인번호 : 제10139호

○ 조사목적

- ▶ 일반 건설업체의 국내건설 기성액을 공중 및 발주자별로 조사하여 건설경기동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조사대상

-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대분류 「F.건설업」 중 국내건설공사
- ▶ 조사업체 : 건설교통부장관 등록업체중 대표도가 50%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기성실적이 큰 업체순으로 선정

○ 조사주기 및 기간

- ▶ 조사주기 : 월
- ▶ 조사대상기간 : 전월 1일 ~ 말일까지(1개월간)
- ▶ 조사실시기간 : 매월 1일 ~ 24일

○ 조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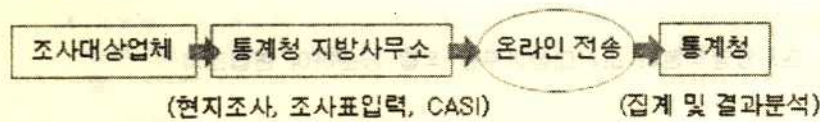
- ▶ 국내건설공사 기성액(도급공사액과 직영공사액)

○ 조사항목

- ▶ 공중별기성액
- ▶ 발주자별기성액

○ 조사방법 및 체계

- ▶ 조사방법
 - 자계식 및 면접 타계식 방법 병행
- ▶ 조사체계



○ 결과공표

- ▶ 주 기 : 매월
- ▶ 집계단위 : 전국
- ▶ 간행물명 : 「산업활동동향」, 「건설수주통계(월보)」

■ 지역소득통계

○ 작성기관

- ▶ 통계청 경제통계국 통계분석과 (전화 : 042-481-2212)

○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 통계의 종류 : 지정, 가공통계
- ▶ 승인번호 : 제10128호

○ 작성목적

- ▶ 시·도별 지역경제의 규모, 생산 및 지출 수준, 산업구조 등을 파악하여 지역경제분석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

○ 작성대상

- ▶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 경제활동 부문별 지역내총생산 및 요소소득
 -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 ▶ 당해년가격 및 기준년가격

○ 작성주기

- ▶ 매년

○ 작성사항

- ▶ 생산계정
 - 농림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수도사업 ■ 건설업 ■ 도소매, 음식숙박업
 - 운수, 통신업 ■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 교육서비스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기타서비스업
- ▶ 지출계정
 - 민간소비지출
 - 가계의 목적별(형태별) 최종소비지출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 정부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 자본재 형태별 총자본형성 ■ 재화와 서비스의 이출·입

○ 작성방법

- ▶ UN이 권고한 국민계정체계(SNA)를 이용하여 작성함.
 - * 2004년 9월부터 새로운 국민계정 체계인 '93SNA로 이행하였음.
- ▶ 지역소득추계는 지역별로 부가가치를 편제하는 것이므로 많은 기초 자료가 필요하고 추계 방법도 다양함. 그러나 기본적인 추계방법은 국민소득 3면등가의 개념에 따라 생산접근방법, 분배접근방법, 지출 접근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 현재 지역소득추계는 생산접근방법과 지출접근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기초자료 사정에 따라 소득접근방법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결과공표

- ▶ 시 기 : 매년 12월말에 전년자료의 잠정추계 결과를 공표
- ▶ 내 용 :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당해년가격, 기준년가격)
 - 시·도별 경제규모 ■ 시·도별 지출규모 ■ 시·도별 경제성장률 ■ 시·도별 경제구조 등
- ▶ 간행물명 :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4. 국가통계 공표일정 - 통계청 정책홍보과 제공자료

※ 2005년 월간 공표자료(6종)

공표자료명	통계조사명	담당과	공표시기	보고서 발간	KOSIS 서비스
소비자물가동향	소비자물가조사	물가통계과	익월초	매월초	공표즉시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복지통계과	익월중순	-	공표즉시
	광공업동태조사	산업동향과			
	제조업생산능률 및 가동률조사	"			
산업활동동향	기계수주통계조사	"	익월하순	-	공표즉시
	건설수주통계조사	"			
	건설기성통계조사	"			
	도소매업동태조사	서비스업동향과			
	경기종합지수	산업동향과			
서비스업활동동향	서비스업동태조사	서비스업동향과	익월하순	-	공표즉시
소비자전망조사 결과	소비자전망조사	통계분석과	익월초순	-	공표즉시
사이버쇼핑물통계조사 결과	사이버쇼핑물조사	서비스업동향과	익익월초순	-	공표즉시

※ 2005년 분기 공표자료(3종)

공표자료명	통계조사명	담당과	공표시기	보고서 발간	KOSIS 서비스
가계수지동향	가계조사	고용복지통계과	2.5,8,11월	-	공표즉시
전자상거래통계조사결과	전자상거래통계조사 (B2B, B2G, B2C 종합)	서비스업동향과	4.6,9,12월	-	공표즉시
인구이동통계 (주민등록기준)	인구이동통계	인구동향과	3,5,8,11월	-	공표즉시

※ 2005년 연간 공표자료(26종)

공표자료명	통계조사명	담당과	공표 시기	보고서 발간	KOSIS 서비스
2004 양곡년도 가구부문 1인 당 쌀소비량	양곡소비량통계조사	농수산통계과	1월	2.25	1.31
2004 쌀생산비조사 결과	농산물생산비조사	"	2월	4.30	4.30
2004 농업기본통계조사 결과	농업기본통계조사	"	2월	3.30	2.28
2004 어업기본통계조사 결과	어업기본통계조사	"	2월	3.30	2.18
2004 혼인·이혼통계 결과	인구동태통계	인구동향과	3월	4.30	3.30
2004 농가경제조사 결과	농가경제조사	농수산통계과	4월	5.31	4.30
2004 어가경제조사 결과	어가경제조사	"	4월	5.30	5.20
2005 청소년통계	-	고용복지통계과	5월	-	-
2004 생활시간조사 결과	생활시간조사	"	5월	9.12	9.12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	7월	-	-
2004 건설업통계조사 잠정결과	건설업통계조사	산업통계과	8월	12.23	12.23
2004 출생·사망통계 결과	인구동태통계	인구동향과	8월	9.30	9.30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	-	행정정보과	8월	8.31	8.31
2004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잠정결과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산업통계과	9월	11.30	12.15
2004 사망원인통계	사망원인통계	인구동향과	9월	11.15	10.31
2004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 결과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농수산통계과	9월	10.31	10.20
2004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국제인구이동통계	인구동향과	9월	11.30	11.30
2004 운수업통계조사 결과	운수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과	10월	11.30	10.18
2004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잠정결과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산업통계과	10월	12.30	12.30
2005 고령자통계	-	고용복지통계과	10월	-	-
통계로 본 남북한의 모습	-	행정정보과	11월	11.30	11.30
2005 사회통계조사 결과	사회통계조사	고용복지통계과	11월	06.1.30	11.30
2005 한국의 사회지표	-	"	12월	12.30	12.30
2004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추계결과 잠정보도	-	통계분석과	12월	6.30	6.30
2004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결과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과	12월	12.30	12.30
2003 생명표 작성결과	-	인구동향과	12월	12.30	12.30

※ 2005년 부정기 공표자료(6종)

공표자료명	통계조사명	담당과	공표시기	보고서 판간	KOSIS 서비스
신인구추계 인구추계	-	인구정책과	1월	-	1월 말
인구추계 추이	-	"	6월	-	-
세계인구추계 인구추계	-	"	7월	-	-
생애주기 인구추계	-	"	10월	-	-
주요사항 인구추계	-	"	12월	-	-
2005 인구주택 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조사과	12월	-	-

도시계획강좌 제1·2강 참고자료
[신문기사모음]

1. 재개발·재건축
 - [한겨레] 2004-05-07 도시정비, 이제 공공부문이 나설 때 2
 - [한겨레] 2005-09-09 '입주권 양도세' 재개발 투기 뚫고있나? 3
 - [한겨레] 2005-06-25 집 장사? 도시 재정비? 안양 9동 5만여평 주거환경개선사업 5
 - [한겨레] 2005-06-23 경찰, 서울지역 126곳 중간수사결과/ '재건축은 조합장 시공사 관료 조족...복합권' 7
 - [한겨레] 2003-12-30 이슈와 쟁점/ 미아동 재개발조합 상가분양 8
 - [한겨레] 2003-05-26 개래시장 재개발·재건축 논란 /미구잡이 추진에 손님만 끊겨' 9
2. 뉴타운
 - [한겨레] 2002-10-25 충분한 검토 필요한 강북 재개발 1 3
 - [한겨레] 2004-10-14 초장정지연대, 서울시 '개발주의' 비판/뉴타운 '균형개발' 구호 강북양 값 올리기로 왜곡' 13
 - [한겨레] 2004-01-31 '뉴타운' 세입자대체도 급조 1 4
 - [한겨레] 2004-11-24 '2차 뉴타운 지정된 면적중 재개발 필요한곳 30% 불과' 1 5
 - [한겨레] 2004-12-09 '뉴타운 반대' 주민 첫 공식청원 1 6
 - [한겨레] 2005-08-19 '뉴타운 취소' 증량주민 행정소송 1 7
 - [한겨레] 2004-01-27 ~ 2004-02-05 뉴타운사업 특검기사 1 7
3. 도시계획시절
 - [한겨레] 2005-9-22 잠실-정당-도곡 재건축계획 확정 2 8
 - [한겨레] 2005-9-8 대구 계성고 옮긴다 2 8
 - [한겨레] 2005-7-25 수도권 그린벨트에 대중골프장 첫 승인 2 9
 - [한겨레] 2005-4-27 '임대주택 개편안' 뭘 답았나 2 9
 - [한겨레] 2005-2-23 시청광장 용도변경안 또 보류 3 1
 - [한겨레] 2005-2-10 '원저동 추모공원' 함소심도 서울시 승소 3 2
 - [한겨레] 2004-12-8 도시계획 뷰어 20년 재산피해 3 3
 - [한겨레] 2004-12-2 미니골프장까지 고삐 풀린다 3 4

1. 재개발·재건축

[한겨레] 2004-05-07 도시정비, 이제 공공부문이 나설 때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값의 급등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답은 자본이득, 주택 투기, 부동산거품 등 부정적이고 복합적이다.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은 별로 없다. 다만 어떻게 하면 재건축의 문제를 단기간 내에 잠재우느냐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러나 재건축은 주택투기와 개발이익의 문제이기 이전에, 도시 정비 문제다. 재건축의 도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단기간에 진정될 정도로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재건축은 재고주택의 노후화와 20년 건축연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며, 도시가 도시개발의 포화상태에 도달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건축 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해도 조만간 도래할 문제이며, 도시 내외에 재건축을 대체할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도시정비에서 공공부문 구실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미래예측 계획을 통해 방지할 수 있으며, 재건축시장의 예상치 못한 변동에 대해 대체거주지 또는 대체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불안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이 도시정비가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적 방안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도시정비를 통해 도시경관과 거주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하는 데 도시정비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주거지역의 막개발을 억제하는 도시개발 법제 정비와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억제조치로 요약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가장 대표적인 법제이며 정비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 경관계획과 함께 중요한 구실을 담당한다. 용도지역의 용적률 하향조정 또한 강력한 개발억제 대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뉴타운 개발 방식은 기존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방식과는 달리 노후주택 정비에 또 하나의 지평을 여는 수법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도시정비 정책의 변화는 효율적인 도시정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규정한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미완성으로 남겨져 있다. 정비사업의 제안주체, 정비계획의 수립주체, 주택 및 기반시설의 공급주체, 정비계획 및 시설설치의 비용부담주체 등이 이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도시정비의 계획과 시행단계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입각한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력으로 도시정비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최저 주택기준과 연계한 정비지역을 설정하고, 정비대상 지역을 유형화하여 막 개발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시범도시제도를 활용하여 기념비적인 도시경비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복지 및 지역경제 증진을 위한 도시정비를 시행하여 거주 공간의 쾌적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도시는 재건축을 통해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도시 탄생에 대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시점이다.

박환용/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한겨레] 2005-09-09 '입주권 양도세' 재개발 투기 열고있다?

"단기적으로는 8·31 대책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투기 수요가 많았던 재건축·재개발 시장에는 치명적이다." 지난 7일 '소득세법'을 바꿔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계산해 양도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시장의 반응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정부 방침이 현실화하면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보자는 심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현재 각종 직진(관리처분계획 통과 이전)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가진 다주택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동안 입주권은 말이 부치지 사실상 투기 목적으로 거래됐다. 그러나 높은 양도세를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를 내다 팔아야 할 판이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2007년 이전에 이린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망세를 유지하던 서울 강남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 입주권이 시세보다 싼 값에 나오고 있다는 말이 벌써 나돌고 있을 정도다.

일반분양이 끝난 단지에서도 올해 안에 상당수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거래되는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는 쪽에서도 입주권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투기꾼 빠져나갈 구멍 막은 셈=재건축 대상 아파트나 재개발 지역의 주택은 철거되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됐다.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각각 1채씩 가진 사람은 재건축 아파트가 철거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아파트 2채와 재건축 아파트 1채를 가진 사람은 1가구 3주택 양도

세 증가(60%)를 피했다. 뉴타운 예정지 등 재개발 지역에서 이른바 '딱지'(입주권)를 수 십개씩 사들이는 투기세력이 출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장아무개(45·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씨는 "가짜 뉴타운에는 한사람이 빌라 6가구를 사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뉴타운 지역은 입주권 투기가 판을 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버젓이 집값이 매겨져 있는데도 입주권은 실체가 한동안 없다는 이유로 토지에 대한 보유세만 내는 등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조처로 재개발·재건축이 더는 투기세력에게 휘둘리지 않게 됐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건축 아파트의 철거만 기다리던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잃은 것이다.

"재개발 중심으로 매물 늘 것"=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 안으로 재건축보다는 뉴타운 등 재개발 입주권 매물이 많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재개발 입주권은 매매 자리에 대한 규제가 따로 없어 올해 안에 팔 수 있지만, 재건축의 경우 투기지구에선 2003년 12월 31일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강남을 포함해 대부분의 대형 재건축 단지들이 투기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게 된 것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재건축 입주권을 갖고 있는 2주택자가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면, 지금 사는 집을 먼저 팔고 자신은 전세로 들어가는 '고유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서울 강남 개포 주공 인근 H공인 관계자는 8일 "아직 매도 물량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값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실수요자들도 판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의 상당수가 차익을 노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만간 양도세를 피하려는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락 시영아파트 인근 D공인 관계자도 "아직까지 매물이 나올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매도 방법을 문의하거나, 재건축 대책이 나온 뒤 분위기가 어떠한지는 전하는 줄을 있고 있다"고 전했다.

친호동 뉴타운 지역 O공인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어쩔 수 없이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값이 내려가고 거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거여동 뉴타운 지역 Z공인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대부분 입지 여건이 뛰어나고, 뉴타운으로 새롭게 개발되는 곳도 주변 기반시설 등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선호도가 높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까지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 실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반면, 강남 개포동 주공아파트 등 이번 조처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단지의 조합원들은 아 직 생기지도 않은 아파트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잠시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곳 조합 관계자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실수요자 힘만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며 "강남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제 막 속도가 붙기 시작한 강북 뉴타운 개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나름대로 분석하기도 했다.

해당 단지 얼마나 되나=현재 강남의 은마아파트나 개포주공, 강동의 고덕주공, 둔촌주공 등 대형단지들은 모두 이번 조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이 추진되는 강북 뉴타운 지역도 마찬가지다. 행정상 2006년 이후 관리처분 통과 아파트도 제한하진 했지만, 내년부터 거래되는 입주권은 주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모두 이번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아직 분양값 등을 책정하는 관리처분을 마치지 못한 곳은 대략 14만9천여가구다. 올해 안에 관리처분이 가능한 가구는 대략 1만여가구 수준이며, 6만6천여가구는 아직 사업 초기이거나 안전진단 정도만 받은 상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8개 단지 9만1천여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65개 단지 4만2천여가구, 인천이 8개 단지 6천여가구 순이다.

특히 강남 개포주공이나 서초 신동아1차, 강동구 고덕주공 2단지 등은 재건축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으나 아직 관리처분을 받지 못해,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2005-06-25 집 장사? 도시 재개발? 안양 9동 5만여명 주거환경개선사업

"멸절한 집 부수고 원주민 내쫓고..."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에서 재개발이나 다름없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당국이 집장사만 하러 왔다"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요구하는 현실과 매우 대조적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안양시는 안양9동 일대 일명 '새마을지구'가 낡은 주택과 도로 등 주거환경이 나쁘다며 이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해 지난해 3월 25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주택공사와 함께 안양9동 995 일대 5만3천여평을 재개발해 2010년까지 2천여가구(일대 1388가구, 분양 1055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진다. 사업이 진행되면 입주인 1455가구와 1538가구 등 모두 2993가구 주민 5676명은 집을 비우고 이 지역을 일

단 떠나야 한다.

멸절한 집 왜 부수나=안양시는 주공에 용역조사를 맡긴 결과, 1985년 6월30일 이전에 지어진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전체의 60.9%(417동)라고 밝히고 지난 5월30일 주민설명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사업 반대 대책위는 "자체조사 결과 46%인 320동만이 노후·불량 건축물이었다"며 재건축기회 부실 조사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사업지구 안에는 7~17년, 심지어 4년도 안 된 아파트가 포함돼 있다.

사업진행을 위해선 S노후·불량 주택 비율과 S무허가 건축물 비율 S호수(h당 가구수) 밀도 S주택점도를 S파소필지 비율 등 5가지들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새마을지구'타당성 조사' 자료에는 노후·불량 주택 비율만 사업 진행에 필요한 50%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비율은 '미달'로 나타나 대책위는 사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거권 박탈인가? 주거환경 개선인가=대책위는 "주민 대부분이 60~70대여서 비록 보상을 받아도 사업 시행으로 들어실 아파트 입주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1999년 이 사업을 한 인근 율목지구는 원주민 재입주율이 20%를 밑돌고 있는 만큼 이는 당국이 원주민을 내쫓고 집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와 주공 측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평균 재입주율은 아직 집계된 것은 없지만 60~70%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사업의 주민 재입주율이 10%대 초반인 것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바 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주민설명회와 공람 광고를 거쳐 주민 3분의 2(세입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진행된다. 현재 반대 주민들이 절반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강제 수용이 될 경우 처참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건설교통부는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거주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낡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도로 등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나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개량, 공공시설의 정비 계획 등을 세워 진행하던 된다.

사업은 주택공사 등이 노후 주택을 사들여 철거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동주택개발방식과 현지 주택을 유지하면서 공공시설 정비는 자치단체가 하고 주택개량은 주민이 하는 현지개발 방식으로 나뉜다.

건설교통부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전국 430개 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고지원 대상 사업지구로 뽑아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현재 선정된 지구 가운데 64곳이 공동주택

방식으로 진행중이다. 한편 주택공사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업으로 56개 지구 4만5105가구를 지었으며, 현재 선정된 64개 지구에 2만1천가구를 계획중이다.

[한겨레] 2005-06-23 경철, 서울지역 126곳 중진수사결과/ '재건축은 조합장지공사 판로 조속...복합진'

지난달부터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22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서울지역 126개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46명을 구속하고 2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조합장의 공금 횡령에서부터 공무원들의 수뢰, 조직폭력배 개입, 공사 금액 부풀리기 등 각종 비리 의혹들이 드러났다. 재건축 현장은 비리 복합진=재건축 현장에서 가장 흔한 비리는 조합장과 시공사가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려 빚돈을 챙기고 조합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었다. 화곡 1지구, 급천 한양아파트, 잠실 1·2·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는 시공사와 조합장이 공모해 부당한 설계변경 등을 통해 수억~수십억원의 배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구로동 비둘기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는 조합장 등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위해 지하실 내벽을 파괴한 뒤 침수시켜 재건축 허가를 받아내기도 했다.

건설팀과 쫓겨, 실제 시공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빚돈이 오갔다. 무학동 연립 재건축 현장에서는 조합장이 시공·철거 업체로부터 사례비로 2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으며, 잠실 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에서도 부조합장이 철거공사권을 미끼로 5천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만큼 공무원과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뇌물 수수도 많았다. 강동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 때는 구청 재건축안전진단 심의위원에게 심의판정 의의신청을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여만원의 금품이 건네졌다.

재건축 이권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했다는 소문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됐다. 정릉 1·2구역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폭이 공갈·협박을 통해 40여억원을 갈취해 8명이 구속되고 22명이 불구속 입건했다. 성산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도 조직폭력배가 개입해 설계 변경을 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올려 200억원대 이득을 얻었다.

민오기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은 "전체 현장 가운데 60% 가량만이 수사가 완료됐다"고 말해 더 많은 비리가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83지구 가운데 14지구 분양권이 로비용=재건축 허가를 내주며 분양권을 뇌물로 받은 구청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 현대아파트아파트 재

건축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거짓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분양권을 받은 혐의로 광진구청 구과장급 공무원과, 시공사 대표, 조합장 등 10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83지구 규모인 이 아파트에서 14가구의 분양권이 해당 공무원과 시공사인 현대아파트스 관계자 몫으로 남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 공무원 8명이 동원돼 도시계획지구 지정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하고 재건축 허가를 내주는 데가로 5채의 분양권을 받아 1억5천만~2억원 가량의 웃돈(프리미엄)을 챙겼다"며 "83지구 가운데 일반 조합원용 50가구와 로비용 14가구를 제외한 19가구의 분양권도 재건축 사업자가 3천만원씩의 웃돈을 받고 불법적으로 의지인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이날 잠실주공 3단지 철거공사를 수주한 철거회사 2곳이 평당 7만원인 철거 비용을 12만원으로 부풀려 비자금 49억원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들이 노임을 지급했다고 밝힌 일용직 명단에는 사망자·군복무자·수감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감독 관청의 관리 강화 △조합 업무에 대한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참여 △조합장과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의 개선책을 관계 기관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2003-12-30 이슈와 쟁점/ 미아동 재개발조합 상가분양

주택 재개발 사업 뒤 아파트에 팔린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지 않아, 수십년 간 장사를 하던 주민들이 생계 수단을 잃게 됐다. 이 단지는 현재 각종 소송이 걸려 있어 공사가 끝난지 2년이 지나도록 준공이 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재개발 계획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관할 구청은 "법적 문제는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조합원 빠진 상가분양=판공질 이 다다다다 붙어 있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 852 일대에 살던 주민 2천여명은 조합을 구성하고 지난 98년 11월 강북구에서 주택 재개발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재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개발이 맡은 재건축 공사는 지난 2001년 12월에 끝났고, 이 곳에는 아파트 5327가구, 상가 두 채(연면적 3042평)가 들어섰다. 주택 조합원은 2017명, 상가분양을 신청한 기존 상인은 325명이다.

그런데 이 조합은 지난해 5월 기존 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아닌 외부인들을 중심으로 상가 130여개를 외부인들에게 일괄 분양했다.

이는 조합이 분양자격을 1998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의 기준이 아니라 2배 이

상 오른 분양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바람에, 대다수 상인들이 우선 분양 자격을 잃은 뜻이다.

조합측은 이에 대해 "애초 상가분양을 신청한 조합원 가운데 분양자격이 없어도 조합원 배려 차원에서 46명을 골라 1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 예상보다 두 배 정도 오른 분양가격 때문에 대부분의 상인들과 조합원들에게 이조차 '그림의 떡'이었다고 상인들은 주장했다.

<부실한 관리처분계획서가 화근=주택 재개발은 조합원 보상과 분양 등 모든 절차를 '관리처분계획'에 명기해야 하고, 관할 자치단체에서 이 계획을 인가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애초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할 때 아파트 분양 기준과 가격, 상가분양 기준과 방법·가격 등을 분명히 밝혀야 이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는 상가 크기를 나누는 기준, 평당 가격을 언제 시점으로 할 지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애초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부실해 분쟁을 부른 것이다.

이문숙 민주노동당 부패추방운동본부장은 "재개발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을 허술하게 작성해 오면 구청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그냥 인가를 내줬다"며 "다른 구청의 인가 내용과 비교해 볼 때도 미아동 경우처럼 부실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또 "상가는 조합원에게 우선 조합원 분양가격으로 분양한 뒤 남은 분양을 일반분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패추방운동본부측은 "상가 조합원이 생계 수단을 잃게 되는 중대한 문제인데도, 관할 구청이 지도·감독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해당 구청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1998년 당시 이 지역 재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구청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에 구체적인 상가 분양 기준이 안나와 있다면,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어 정하는 '정관'에 따라 처분하면 되므로 인가를 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겨레] 2003-05-26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논란 / 마구잡이 추진에 손님 끊겨

"평생 소원이 이뤄지거나 했을 때, 이제 남은 것은 빛뿐입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시장에서 20

여년 동안 파릴 노점상을 했던 문아무개(56)씨는 '자신 명의의 가게'에서 장사하는 게 소원이었다. 그는 1997년 재래시장을 열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가에 은행 대출과 사채를 끌어모아 8500만원을 주고 상가 분양권을 샀다. 그러나 상가 장사가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 안 되고 이자는 불어나 결국 살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다. 현재 문씨는 또 파릴 노점상이다.

서울시가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오히려 '재래시장 망치기'라는 평을 듣는다. 새 상가가 들어선 건물 주위에 또다른 재래시장이 형성되는가 하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세입 상인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해 또다시 노점상으로 나서고 있다.

<재래시장 현황=서울시 재래시장(지난해 말 기준)은 무동북시장까지 합해 모두 312곳이다. 이 가운데 160개 재래시장은 2006년까지 기반시설 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나 건물이 낡아 붕괴 위험이 있는 곳 등은 재개발·재건축을 하며, 현재 추진중인 재래시장은 52곳이다. 41곳은 주상복합, 11곳은 상가 전용 건물이 들어선다. 지금까지 7곳에서 공사가 끝났다.

이 가운데 관악구 신림12동 천성세이브마트는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으로 재건축해 성공한 경우다. 난포 지역 인구는 13만여명인데, 대형 유통마트는 한 곳도 없었다. 재래시장인 난포종합시장을 재건축해 2000년 대형 유통마트로 변신한 뒤 수입이 200% 정도 늘었다.

그러나 다른 재개발 시장들은 시공사와 분쟁, 잘못된 상권 분석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곳이 많다.

<재개발 뒤 다시 생기는 재래시장=1998년 서울 강북지역의 주유재래시장 자리에는 지상 21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가 세워졌다. 이 건물 지하 1층~지상 5층은 상가다. 그러나 지금은 빈 상가가 있을 정도로 상권이 활성화하지 못했다. 오히려 상가건물 옆으로 새로 온 재래시장이 노점상을 중심으로 다시 형성됐다. 강북지역의 창동재래시장 자리에도 지상 12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섰다. 여기서도 옛 재래시장 상인들이 다시 노점상을 차려 지하철거 입구에서 아파트 주변까지 늘어섰다.

지하 5층, 지상 25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서울 돈암시장 옆에는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바깥시장'이라고 부르는 새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돈암시장 상인들 이 바로 옆 상가를 얻어 장사를 하기 때문이다. 이전의 '바깥시장'은 빈 상가들이 있을 만큼 돈암시장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은 곳이었다. 지금은 돈암시장에서 밀려온 상인들 때문에 상가 임대료가 두 배 이상 뛰었다.

세로 지은 상가와 재래시장이 공존하는 현상이 벌어지자 부각용이 생겼다. 새 건물에 들어오는 상가와 재래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겹쳐 서로 상권을 뺏는 상황이 된 것이다. 도봉구청 노점 관련 민원해결담당 조태강씨는 "주상복합 건물 상인들은 주위 노점상 때문에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반면 노점상들은 수십년 동안 자신들이 형성한 상권이라고 맞서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화개혁시민연대 이상현 공간환경위원장은 "주상복합아파트 등으로 재개발하는 것은 재래시장의 특수성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영세 세입자인 울리는 재개발=이제 어떻게 먹고사나 걱정이지. 차라리 일찍 눈감아 버렸으면 좋겠어." 서울 돈암시장에서 30여년 동안 채소를 팔고 있는 이아무개(73) 할머니는 요즘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시장을 재건축한다며 갑자기 철거반들이 들어다쳐 시장 일부를 철거했기 때문이다. 아직 철거되지 않은 시장 구석에 자리를 펴고 야채를 팔며 자취를 펴쳐 왔지만, 흥가처럼 번해버린 시장에 손님이 울 리 없다.

이 시장 세입자인들은 얼마 전에 철거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철거대책위의 요구사항은 세입자에게는 임대상가를, 주거 세입자에게는 영구임대주택이나 가수용단지를, 시장 안의 노점상에게는 노점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는 것이다. 심상길(48) 부평위원장은 "한 재건축 조합원이 나에게 인연을 끊자고 했다"며 "가족처럼 지냈던 시장 사람들이 이제는 주인과 세입자로 나뉘어 서로 적을 보듯 한다"고 한탄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은 "신진국에서는 재건축을 하면 실제 영업권을 따져 보상을 다 해 주지만, 우리나라는 세입자에게 아무 권한이 없다"며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허가를 내줄 때 세입자 보호 장치나 보상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도심 과밀화 우려=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서 재래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400~450%(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500~600%)로 완화했다. 일반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이 250%인 점을 고려하면 건물을 두 배 정도 높게 지을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2중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까지 올릴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건고실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서울시 조례개정안은 기반시설 부족, 주변 지역과 부조화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과밀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러한 완화조항은 주거지역 생활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므로 허용 용적률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 이정호 서울시 재래시장대책반장

"대규모 할인마트가 늘어나고 소비 유형도 바뀌는 상황에서, 재래시장도 시대 흐름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서울시 재래시장대책반 이정호 반장(사진)은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 과정에서 부각용이 생길 수 있어,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재래시장 각각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재개발을 추진하는 시장에 관련 연구 용역비 2천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해 준다"며 "시는 지난 7일부터 각계 전문가 7명으로 자문기동반을 구성해 재개발·재건축·유통 관련 문제가 생기면 상인들에게 컨설팅이나 유권해석 등을 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래시장 재개발은 소규모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건축비 단가가 높아 사업성을 보장해 주려고 용적률 등에 혜택을 준다"며 "이로 인해 과밀화나 나홀로 아파트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서 특별법이 허용하는 용적률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치(일반주거지역 400%, 준주거지역 450%)를 적용하고 있다. 또 임대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임점 상인 대책을 꼼꼼히 확인한다. 그러나 이미 재개발·재건축이 끝난 재래시장은 지원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개발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이때 지원도 받아야 한다.

이 반장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 개정안은 각 시도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재개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2. 뉴타운

[한겨레] 2002-10-25 충분한 검토 필요한 강북 재개발

서울시가 내년부터 착공할 강북의 3개 재개발 시범지역을 확정해 발표했다. 은평구 진관내·외동 및 구파발 등을 균형발전 추진지구로 지정해 뉴타운으로 재개발한다는 것이다. 종전에 주민조합이 주체가 되어 재개발을 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시가 도로·공원·학교 등 공공시설을 지원하고, 도시개발공사가 환지·토지수용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시범사업을 기초로, 서울시는 2012년까지 20여 곳의 주거 중심형 뉴타운을 만들어 강북의 주거환경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남과 큰 격차를 보이는 강북지역 개발에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기대를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과 마찬가지로 이 일이 이렇게 서둘러서 될 일인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강북의 재개발이 원칙 없는 막개발로 얼룩졌기에, 더구나 비슷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10년에 강북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계획은 박력이라기보다 오만으로 비친다.

강남에 서울의 부가 집중되고 사람들이 강남을 선호하지만, 강북 재개발의 모델이 강남이어서는 안 된다. 강북은 6000 고도 서울의 역사가 숨쉬는 곳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4대문 안이 아니라 예도, 기존의 삶의 흔적을 무시하고 뉴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무엇보다 서울이 지난 자연과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전체에 대한 철학과 구상이 선행되고, 그 위에서 각 지역의 재개발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길음동 지역에 1만3천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려면 상당한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을텐데, 북한산 자락에 고층아파트가 희결한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또 길파만이 아니라, 기존 주민들의 민권해결 등 추진 과정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한겨레] 2004-10-14 초록정치연대, 서울시 '개발주의 비판' 뉴타운 '균형개발' 구호 강북방앗 울리기로 외곽

이명박 시장이 주도하는 서울시정이 '환경친화적'이라는 외명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울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존치형 개발 불을 허물어버린 '개발주의'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초록정치연대가 연 '환경·문화·나눔을 위한 서울시 재편 방향'이라는 포럼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정은 '개발주의' =발제자로 나온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경제학 박사)은 청계천 개발과 뉴타운 사업의 개발주의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 박사는 청계천 복원에 대해 "상류의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화처리된 생활하천이 직접 배출되는 청계천은 미세오염이 우려되는데다 시민 접근성도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시가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결국 주택 소유자와 투기자들에게만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올해 이 시장의 신년사에서 시범지구 중심의 단계적 추진에서 25곳 임시추진으로 사업방식이 갑자기 바뀌었다"며 "이전 시장들이 취해왔던 '존치형 개발' 틀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뉴타운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강남북 균형개발도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타운 사업에서는 '땅값'이 강남북 균형의 기준이 필요해서 결국은 강북 토착주택 소유자들의 개발이익에 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기존 서울 재개발지구의 공인녹지율과 도로율 등 주거환경이 신도시에 견줘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최근의 고밀도 개발의 부작용을 우려했다.(표 참조)

◇ '서울지역 정치의 대안주제 필요하다' =우 실장에 이어 발제자로 나온 시행된 초록정치연대 간사는 "서울에는 시민사회가 있다"며 "시정을 감시하는 대안적 정치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간사는 "서울에는 진국 차원의 시민단체들은 많지만 정작 시정에 대한 일상적 감사와 대안 제시를 하는 곳은 없고, 시의회도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어 행정감사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정감시를 위해서 각 구에서 활동 중인 풀뿌리운동 단체와 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도 시·구의회 출마 등의 활동으로 대안주제로 키우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2004-01-31 '뉴타운' 세입자대제도 급조

개발과 저소득층 보호, 저금까지 서울에서 이 둘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였다. 시는 개발을 명분으로 저소득층 원주민들을 밀어내기 일수였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은 도시에서 가장 개발이 덜 된 지역이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내건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에서도 이런 악순환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뉴타운 지역에 따라 공급되는 가구수를 지금 거주하는 가구수보다 최대 41%까지 적게 잡은 계획은, '뉴타운이 정은 터전을 동치고 떠나는 저소득층의 희생'에 이뤄지는 것임을 단적으로도

러낸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적 여론이 일자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원주민 재정확보를 50%로 높이고, 재정확보를 원하는 '새입자 모두에게 임대아파트를 주겠다'는 말 그대로 '명'명적'인 대책을 연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 내부에서조차 그의 이런 언급은 공허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도 뉴타운 지역에 사는 새입자가 모두 몇 가구이고, 그 중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원하는 새입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추정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계정확률 50%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그 근거는 무엇인지, 공식 논의결과는 있었는지

에 대해 시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임대주택을 원하는 새입자에게 모두 임대아파트를 주려면 뉴타운 아파트의 70~80% 이상(10만가구 안팎)을 임대주택으로 건축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이미 대형 평수의 아파트만을 선호하는 영주인들에게 개발 방식의 결정권을 내준 상태다.

그동안 새입자와 저소득층의 회생을 도모시켰던 서울시의 '혁명적'인 뉴타운 새입자 대책이 또다시 실제 없는 대책으로 판명돼 영세한 시민들을 두번 상처받게 할까 걱정된다.

[한겨레] 2004-11-24 '2차 뉴타운 지정된 민적중 재개발 필요한곳 30% 불과'

서울시가 지난해 지정한 2차 뉴타운 지구 대부분이 주거환경이 양호해 재개발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인숙 박사(도시계획학·도시연대 도시정책센터장)는 23일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서울시 뉴타운 개발의 방향 및 정책적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윤 박사는 "애초 뉴타운 지구 선정 기준은 여러 개의 재개발 지구를 생활권 단위로 묶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2차 지정된 12곳의 뉴타운의 총 면적 가운데 정비(예정)구역은 3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비(예정)구역은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면 재개발이 불가피한 곳에 지정된다.

윤 박사는 "정비(예정)구역이 50%가 넘는 곳은 한남, 전농, 중화 지구 세 곳뿐"이라며 "특히 중화 지구는 지난해말 뉴타운으로 먼저 지정된 뒤, 올초야야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이유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켜 합리적 절차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화 지구에는 올초 서울시에서 가장 용량이 큰 빗물펌프장이 건설돼 침수 대책이

이미 마련된 바 있다"며 "주거환경이 양호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 상당수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7년 이상의 노후주택 비율도 방화 지구를 제외한 모든 뉴타운에서 50% 이하로 나타나 2차 뉴타운 지정의 적절성에 의문이 간다고 윤 박사는 말했다. 원호 지구는 21.3%, 한남 지구는 22.1%에 지나지 않았고, 50%를 넘는 곳은 방화, 영등포 지구뿐이었다.

윤 박사는 "강북에 강남 수준의 고급주거지를 만들려면 수요가 뒤따라줘야 하는데, 원주민이 그만큼 주거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차 뉴타운에서 새입자 비중이 67.9%에 이른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가짜 뉴타운 설계 계획에 참여하는 이승주 시경대 교수는 "뉴타운은 소규모 민간단위로 시행돼 온 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연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원주민 정착률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뉴타운은 해당 자치구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이기에 때문에 총 밀도가 450명/ha 수준"이라며 "원주민을 모두 수용하려면, 법정 상한선 이상의 용적률이 필요하게 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구하는 뉴타운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2004-12-09 '뉴타운 반대' 주민 첫 공식청원

최근 뉴타운 신정의 적합성과 관련된 논란을 빚고 있는 중화 뉴타운지구 주민들이 중앙구의회에 반대 청원을 냈다.중앙구의회는 8일 '중화·목동 뉴타운 반대대책위가 뉴타운 사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김경화 중앙구 의원의 소개로 지난 6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다음주께 상임위원 '중화·목동 뉴타운특별위원회'에 넘겨져 심의될 예정이다. 뉴타운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행정관청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화·목동 뉴타운 반대대책위는 청원서에서 "중화 뉴타운 계획은 '사회보장형' 다가구를 소유하는 고령자가 많고, 주민들 위주로 소상권이 형성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원천절거 방식의 개발보다는 10년 이하의 양호한 건물을 존치하고 여러 상가를 묶은 주상복합 형식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간이 주도해 개발을 추진해야 하지만, 통장과 동 자치위원들이 뉴타운 추진위에서 일하는 등 중랑구청이 정책 집행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02년 말 은평·양심리·길음 세 곳을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2차 뉴타운지역 12곳을 지정했다. 또 올 상반기 안에 10여 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이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차 뉴타운까지 15곳을 올해 안에 모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재개발 지역은 학교나 녹지 등 공공시설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막개발로 남기 일쑤였지만, '뉴타운'은 시가 예산을 투입해 공공시설을 놓아 주고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면에서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애초 뉴타운 발표 당시와는 달리, 최근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다양한 우려와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체계적인 밀그림 없이 뉴타운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면 '뉴타운'이 오히려 '계획적 막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로나 상·하수도, 녹지같은 기반시설들이 선으로 연결돼 있는 도시 안에서, 길을 깨끗 뉴타운을 지정해 개발하면 인근 지역에는 교통정체와 환경오염 등 부작용이 무더기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도시지리학)는 "길음 뉴타운과 인근 재개발 지역인 북한산시대에 2만 가구의 중산층이 새로 들어와 이 지역 자가용 운행량이 늘어났다"며 "하지만 동원, 의정부, 수유리 등에서 해화동으로 넘어오는 길은 여전히 미아리길과 국민대 앞길 뿐이어서 교통란이 악화되는 식"이라고 예를 들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서울의 발전 방향을 놓고 시민들의 논의가 진척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사업 중심의 개발을 서두르는 대목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다.

서울시는 강북 재개발을 2012년까지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길게는 600년 후에는 50년 동안 형성된 서울을 '몇 년만에 뜯어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명태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뉴타운의 개념이 원지, 서울같은 대도시에서 '뉴타운'을 만들려면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강남·북의 격차는 겉으로 보이는 주거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군이나 산업구조처럼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사업으로는 강남북 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뉴타운' 사업이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이라는 애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긴 호흡으로 도시 전체의 발전 방향을 세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한겨레] 2005-08-19 '뉴타운 취소' 중랑주민 행정소송

서울시 뉴타운사업에 반대해온 서울 중랑구 중화·목동 일대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뉴타운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중화·목동뉴타운반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목)는 18일 '서울시가 2년 전 수해방지를 목적으로 이 지역을 뉴타운사업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빗물펌프장 신설 등으로 이미 명분이 없어졌다'며 "주민 247명 명의로 '뉴타운지구 지정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서울시에 중화뉴타운 지구 지정의 직권취소를 신청했으나 서울시는 지난 3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들은 소장에서 "관련 법령에는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 요건으로 △노후·불량주택의 비율 △철도를 스카스필지나 세강형 부정형 필지의 비율 △상습침수지역 등 재개발생의 우려 등을 들고 있으나 중화뉴타운 사업지구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개발사업을 벌인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기간 동안 주민들 갈등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원주민들을 내쫓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개발기본계획 승인을 내줄 경우엔 개발기본계획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2004-01-27 ~ 2004-02-05 뉴타운사업 특집기사

[서울 뉴타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1) 마스터플랜이 없다

한강 남쪽과 북쪽 지역을 균형발전시키자는 서울시의 강북 '뉴타운'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백만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개편하는 대규모 도시계획 사업이지만, 정작 거주민들에게는 '개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부터, 부작용을 양산하는 구시대적 개발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예상되는 뉴타운 사업의 부작용과 허점은 무엇이고, 시민을 위한 올바른 뉴타운개발방식은 무엇인지 6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취임 직후인 2002년 7월, 강남·북간 지역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 강북의 약 25개 지역을 '뉴타운'으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대한 해결책부터 다각도로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은, 이미 대상지역을 무더기로 선정하고 확공일정까지 밝힌 상태인데도 '서울의 증가기적 발전방향과 강북 진척에 대한 청사진은 현재 마련중'이라는 서울시의 '여유' 탓에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서울 뉴타운 뉴구를 위한 개발인가] (2) 백화점식 개발방식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별로 특색에 맞는 사업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방식을 제시했다. 지난해 제정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뉴타운 사업은 스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적용할 수 있다.(표 참조)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여러 개발 수법을 도입한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선택의 여지를 넓혀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도 한 뉴타운 지구 안에 두 개 이상의 개발방식이 적용되면 관련 법규거리의 상충으로 갖가지 문제가 불거질 것이 확실시된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각각 도로 등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해야 하는 비율이나 녹지 비율 등도 달라,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여러 법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한 뉴타운을 여러 사업지구로 나누고, 사업지구별로 각각의 사업방식을 택하면 되므로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뉴타운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나 연구용역 업체 관계자들의 반응은 김 단장과는 영 판판이다. 실제 한 자치구의 의뢰로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한 업체의 고위 간부는 27일 "사업지구마다 잇따르는 개발방식과 근거 법규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침이나 조정안이 없어 기본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한마디로 개발방식이 서로 다른 사업지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물론 공무원들이 틀어갈 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뉴타운 전체를 아우르는 기준이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뉴타운 지구 안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규정이 상충조정될 수 있고, 주택재개발지역 조건을 완화해 줄 수 있어 형성성 논란도 일고 있다.

용적률 150%에 4층으로 높이제한을 받는 1층 주거지역도 뉴타운 안에서는 2층(용적률 200%, 높이제한 7층이나 12층)으로 상향조정 될 수 있다. 또 주택재개발지역 지정 조건인 헥타르당 건물 호수밀도도 70에서 60으로 완화된다. 김 단장은 "뉴타운 개발로 도로가 늘어나는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므로 용적률 등 종세분화 변경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뉴타운 개발과정이나 이후의 각종 민원을 최소화하고, 인접지역과의 합리적 연계를 위해선 종세분화 완화나 주택재개발지역 지정에도 합리적인 시의 기준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과 남진 교수는 "종세분화를 바꿀 때는 뉴타운과 접해 있는 지역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고,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을 자를 때도 필지가 아닌 도로나 블록을 기준으로 정하는 등 명확한 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 뉴타운 뉴구를 위한 개발인가] (3) 주민갈등 추추킨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2차 뉴타운 지구 12곳을 발표하면서 "뉴타운 사업의 추진주체는 자치구청장과 지역주민이고, 사업방식은 '주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의 판 주도 방식이 낡았단 비민주성과 비합리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의 뜻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시의 의도는 '철거 대상주'로 태변되던 기존 재개발 방식에 견줘 진일보한 게 사실이다. 특히 주민들의 협조가 사업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애초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2차 뉴타운 지구가 선정된 뒤 두달 남짓한 시간이 흐르는 사이, 서울시의 정책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고 있다. '주민의 뜻'에 개발방식을 맡긴다는 '이상'과 주민끼리 엇갈리는 이해라는 '현실' 사이의 부조화가 풀기 어려운 난제로 떠오른 것이다.

주택 세입자, 상가 세입자, 영세 집주인, 다세대주택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 집단들이 각기 다른 사업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공성보다 개발 이익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왕십리 뉴타운은 애초 시가 중저층 아파트 중심의 기본구상을 밝혔지만, 주민들이 고층·고밀도의 입자형 아파트를 위해 기본계획이 바뀌었다. 주민들의 요구에 밀려 시가 '공공성'을 한 발 양보한 것이다.

진동 뉴타운의 경우 뉴타운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누가 어떤 업체에서 돈을 얼마 받았다더라' 식으로 서로 헐뜯는 악성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

2차 뉴타운 지구로 선정된 한 자치구는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 작업에 들어갔는데, 토지구

와 건물주 대표단 뽑고 세입자 대표는 뽑지 않아 이 지의 세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영등포구 신길동의 경우 3차 뉴타운 지역 지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뉴타운 개발에 대한 찬반의견으로 나뉘어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엠에이(총괄 계획자)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주민 각 계층 사이, 시와 주민 사이의 의견차이를 조정하면 된다"며 "엠에이와 함께 수심차레 주민 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론 공공성과 주민 합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을뿐더러, 공공 영역이 '주민'을 내세워 본래 의무는 다하지 않고 혼란만 더 일으킨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조은 동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한다는 것은 길으로는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시장중심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주민 중심인지 지역 개발 중심인지 동 시가 도시공간에 대한 철학을 먼저 정립하고, 그 뒤에 주민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 뉴타운 뉴구를 위한 개발인가] (4) '강북' 정체성을 살리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의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강남북의 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다. 남로 벌어지는 강남·북의 격차를 줄이고, 강북에도 강남처럼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이 사업은 이명박 시장의 핵심 선거공약이었고, 이 시장의 당선은 이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어느정도 확인해 준 셈이다. 실제 지금도, 사업이 성공할 경우, 천정부지로 치솟아 온 강남의 아파트 값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의욕적인 구상이 실현에 옮겨지면서, '구상'단계에선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던 이 시장의 '개발 철학'이나 서울시의 '일단 짓고 보자'식 개발에 '제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강북은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였던 만큼, 원 도화지에 새로 그림을 그리듯 개발을 해선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기다. 강북의 정체성을 먼저 연구하고 그 정체성을 살리는 뉴타운 개발이 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간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계획 수립 단계를 밟고 있는 게 현실이다.

왕십리 뉴타운의 총괄 계획자인 이상민 교수(건국대 건축실계)는 "학과와 시민사회에서 강북의 정체성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연구도 제대로 안돼 있는 실정"

이라며 "어디를 어떤 식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것인지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는 받았던 땅이 불과 몇십년만에 주거지로 바뀐 강남과 달리 강북은 수백년 동안 사람들로 이 살아 온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지역이다. 왕십리는 여름만 되면 범람하는 청계천 물을 피해 높은 지대를 찾아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한국전쟁 때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정착한 해방촌에선 일제식민지 때 지은 일본식 건물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강북 전체를 아우르는 정체성 논의가 없다면, 결국 이런 지역적 특징들은 모두 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강북 주거지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오늘의 틀을 갖추는 동안 형성된 '이웃 공동체'는 강북의 정체성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원주민들의 재건축과 공동체 유지는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음뉴타운의 틀을 짰 문종길 총괄 계획자(엠에이) 조차도 "뉴타운 개발 뒤에도 '역사도시' 강북'이 이어질 수 있으려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쌓인 문화를 보존하고, 원래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살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뉴타운 개발은 점진적이고 소규모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뉴타운 안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뉴타운 바깥 지역과의 연결도 고려해야 하므로,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 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북의 정체성을 살리려면 철거식 재개발보다는 한 건물이나 작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가는 방식을 고려하라는 조언도 많다. 정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면 철거 재개발은 주민들이 몇대를 이어오며 형성한 주민 공동체를 깨고, 세입자와 중하위 계층을 밀어낼 수 있다"며 "복촌 한옥마을에 서울시가 집 수리비를 보조해 주는 것처럼, 뉴타운 대상지역에서도 공공예산을 지원해 주민들이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뉴타운 뉴구를 위한 개발인가] (5) 외국 사례

뉴타운 사업처럼 옛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개발의 대표적 전례로, 국내의 전문가들은 독일 서베를린, 일본 도쿄도 등을 꼽는다. 하지만 이들 선진국의 개발 사업은 여러면에서 뉴타운과는 많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두 곳 모두 재개발을 민간에 맡기는 대신, 공공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이끌어 오고 있다. 게다가 개발사업을 벌이며 독일은 예술과 전통을, 일본은 주민들이 '뜻대로 이어 살아 온 마을에서 계속

<한겨레>는 '서울뉴타운, 뉴구를 위한 개발인가'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서울시와 함께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를 초청해 '바람직한 뉴타운을 설계한다'는 주제로 좌담회를 마련했다. 지난 2일 오후 3시 한겨레신문사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선 뉴타운 사업을 총괄하는 김 병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제기된 뉴타운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가며 보편·개선책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단장은 서울시의 뉴타운사업 추진에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참석자들의 비판에, '민간이 주도하는 공영 도시개발방식'을 입안하고 있다며, 이 방식이 적용되면,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성을 살리며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욕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단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영 도시개발방식"은 최근 법률적인 검토까지 끝났다고 밝혔으나, "최종 마무리가 남아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의 공개는 다음으로 미뤘다. 참석자

- 김병일=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 윤인숙=도시연대 도시정책센터장
- 이재준=경실련 도시재생위원장(협성대 교수)
- 사회=양상우 사회부 수도권팀장
- 배·꽃=2004년 2월2일 본사 5층 회의실.

사회=2와 뉴타운지역의 공급가구 수가 지금보다 많게는 40%까지 줄어들게 돼 있는 자치구들의 사업계획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적 여론도 적지 않다. 먼저 뉴타운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가구가 건립돼야 하는지부터 얘기해보자.

김=일단 지금까지 나온 뉴타운 지역의 주택공급규모와 관련된 계획은 모두 확정된 게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특히 뉴타운 신정을 위해 자치구가 만든 계획은 현장 실사를 거쳐 만든 게 아니고, 실무적인 착오로 잘못 만든 대목도 뒤늦게 확인됐다. 최종 공급가구 수는 애초 자치구의 계획보다는 분명 큰 폭으로 늘어갈 것이다. 더 정확한 공급가구 수는 용역회사가 현장조사를 벌이고 주민 의견을 모아 기본 구상안을 만드는 4월께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이=뉴타운에 공급될 가구수를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은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나 다를 없다고 본다. 주민들의 인구 구성이 어떤지, 재정착을 원하는 주민들은 얼마나 되는지, 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중시했다.

◇ '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 일본에서 재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이다. 1981년부터 2001년까지 20년 동안 진행된 도쿄도 카미야 지역의 재개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성과 최우선우택이 빠르게 늘어난 달동네였던 이곳에서, 일본의 주택도시경비공단은 먼저 인근의 공장용지를 사들인 뒤 여기에 주민들이 임시로 이주해 살 수 있는 집을 지었다. 사전에 세입자를 포함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임시 주택에 들어갈 주민들과 다른 곳으로 이주할 주민들의 숫자를 파악한 뒤, 필요한만큼 집을 짓는다.

본격적인 개발은 마을의 도로와 역사적인 장소 등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최대한 살리고 보수가 힘들만큼 남은 건물 중심으로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개발 뒤에도 마을의 큰 골격은 전과 같아, 주민들은 쉽게 새 마을에 적응하고 애락을 느낄 수 있다.

주민들이 공사 기간동안 살았던 집들은 임주한 주민이 계속 살 수 있고,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다른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대해 줄 수도 있다.

'카미야'의 사례는 재개발이 일부 지주들이 '돈 버는 사업'이 아닌, 주거지를 쾌적한 공간으로 되살리는 작업임을 보여준다.

◇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서' = 독일 통일 전 서독정부는 베를린 광역 지역 재개발을 위해 1987년 베를린 국제건축전(IDA)을 열었다. 그러나 서독정부는 그로부터 이미 8년전인 1979년 건축전을 위해 '국제건축전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이 기구는 건축전의 개념 설정에서 설계공모전과 사업추진까지 모든 과정을 이끌었고, 그 결과 베를린 광역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개별 건축물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재개발을 추진했다.

베를린은 옛부터 예술과 문화의 도시였다. 서독정부는 통일에 대비해 베를린 광역 지역의 개발은 최대한 억제했지만, 노숙자와 불법체류자들이 몰려들어 결국 낙후지역이 돼 버렸다. 서독은 베를린의 전통을 살리는 재개발을 위해 '인간적이고 예술성이 높은 도시 재개발'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건축전을 열었다.

수백명의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건축전에 참여했다. 건축가들은 자신의 설계안이 채택되면 실제 건축물을 해당 터에 지을 수 있었고, 지역주민들도 계획단계부터 참여해 그들의 뜻을 반영했다. 결국 서독정부의 옛도시 재개발 사업은 '성공적'이란 평가와 함께, 새로운 관공명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입당당성을 위해서는 적정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우선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지 않나? 이를 분석과 조사를 토대로 뉴타운 지역을 선정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든다. 서두르지 말고 3개 시범지역부터 끝낸 뒤,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2차, 3차 뉴타운 사업을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빠르게 진행하면 오히려 막개발을 부를 수 있다.

김=현현한 한 골짜기 개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수 있지만, 도시는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그 사이 주민들이 스스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겠다고 나서면 시가 막을 수 없고, 과거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이 그대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개발은 신속적으로 조정하더라도 계획만은 서둘러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기존 민간이 추진한 재개발은 사업성만 추구한 탓에 도로나 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았고, 인근 지역에도 악영향을 끼친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시가 뉴타운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사회=뉴타운 선정 과정에 대한 의견이 다르더라도 세입자나 영세집주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은 모두가 동의하는 시급한 과제로 보이는데.

윤=뉴타운 시범사업 지역들은 기존 재개발 구역을 묶어서 계획을 세운 곳이다. 이에 반해 2차 뉴타운 지구들은 재개발 지역이 아닌 곳도 많다. 개발방식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땅주인들이 재건축을 고집하면 임대주택을 지을 수 없는 게 현실이어서 세입자들은 결국 다른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시가 뉴타운 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강북지역의 싼 주거지들이 없어져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당달아 뉴타운 인근지역 전셋값도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시는 지금이라도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올리고, 임대 형태도 다양화해야 한다. 또 저소득층을 위해 소형 평수 주택도 늘려야 한다.

김=사실 과거의 재개발사업에선 주민 재정착률이 13% 이하로까지 떨어진 곳도 있었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에선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의 주민이 최대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우선 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짓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조합'을 바꿔 재개발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총공급가구수의 17%나 전체 세입자 가구수의 35%까지 상향조정했다. 또 임대주택 의무조항이 없는 '재건축' 등의 방식 대신 '재개발' 방식을 채택하는 지역이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임대주택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는 재건축이나 다른 개발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공영 도시개발방식'을 연구해왔으며 조만간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방식은 공공개발의 장점인 공공성,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민간의 장점인 사업성, 사유재산 보호, 주민 의견 보호 등을 결합한 방법이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임대아파트도 충분히 확

보할 수 있고, 다양한 평수의 주택도 지을 수 있다.

이=수도심 활성화 특별법'을 만들자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건 어떤가. 그 법에 따라 임대주택과 각종 사업방식 등을 정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역별로 세입자와 영세민 구성비율을 파악하고 뉴타운 정착의사를 조사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김=참고하겠네.

사회=세입자 등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결국 각 뉴타운지구에서 어떤 개발방식을 택하는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발방식의 선택을 둘러싼 땅주인과 세입자 등의 알력 등 주민 사이의 갈등을 푸는 것도 풀기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이=2차 뉴타운 추진 주택은 자치구와 주민이고, 사업방식은 지역주민이 택하도록 돼 있다. 주민 협조가 사업 성공의 열쇠다. 주민들이 나뉘어 다투는 것은 사업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다. 주민 스스로 사업을 제안해 오는 미국처럼, 시가 더 적극적으로 협의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단체와 주민단체가 여러 안을 제출하고 시가 그것들을 묶어서 추진하면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주민이 먼저 제안하는 방법, 정말 좋은 얘기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진 주민단체가 없다. 대다수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안타깝게도 용적률, 즉 개발이익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뉴타운 시범사업을 하면서 수십차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게 주민들을 설득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주민들을 합리적인 대안으로 설득하는 것만큼 현실적이고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윤=계획을 큰 단위로 잡으면 그 지역에는 무수히 많은 이해집단들이 있어서 충돌을 낳는다. 사업 단위를 작게 쪼개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시민단체가 조정기구 기능을 할 수 있다. 또 시민과 서울시, 토지공사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뉴타운 개발공사'를 설립해 앞으로 27개 사업 지구별 공사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강북의 정체성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도 학계와 시민단체의 큰 관심사인데.

이=강북의 정체성을 살리려면 먼저 전면 판결이서 사업방식을 피해야 한다. 기존 공동체를 살리고 강북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려면 마을 단위, 골목 단위의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이 기회에 마을가꾸기 사업도 시의 조해에 담아내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

[한겨레] 2005-9-22 잠실-정답·도곡 재건축계획 확정 기준 용적률 230% 이하로...여의도지구 심의보류

서울 잠실아파트지구와 정답·도곡아파트지구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정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구 안 아파트단지는 조만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계획안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열어 잠실아파트지구와 정답·도곡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각각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송파구 잠실·신원·풍납동 일대 잠실아파트지구(96만여㎡)는 주거용지 비율이 74.4%에서 69.0%로 낮아진 대신 공원·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용지 비율은 20.3%에서 22.5%로 높아졌다. 반면 강남구 청담·삼성·역삼·도곡동 일대 정답·도곡아파트지구(111만여㎡)는 주거용지비율이 74.6%에서 75.5%로 높아지고, 도시계획시설용지는 21.8%에서 20.7%로 낮아진다. 기준 용적률은 두지역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30% 이하로 결정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미아뉴타운 내 강북6구역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최대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개발부문)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강북구 미아6동 1268-1 일대 재개발구역에서는 지형에 따라 최고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으나 용적률 190%, 건폐율 50%는 종전대로 적용된다. 한편 여의도아파트지구 정비 변경계획은 심의 보류됐다.

이찬영 기자 ley100@hani.co.kr

[한겨레] 2005-9-8 대구 계성고 육긴다 학교터 좁아 상리동으로 2008년 이전

대구 계성고등학교가 2008년 3월 대구시 서구 상리동으로 옮긴다.

대구시 교육청은 "현재 중구 대신동에 자리잡은 계성중·고교의 터가 좁고 50년 이상된 건물에 낡아 서구 상리동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계성고교는 2008년 3

윤=강북에 맞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적용해, 경제성을 찾는 개발의 진형을 보여주기 바란다. 예전대 주민들이 '이해부족'으로 중저층 아파트를 반대하면 서울시가 서투르지 말고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며 풀 수 있다. 단기간에 끝내려 하다가는 강남처럼 고층아파트 단지만 조성하게 되고, 강북의 경제성은 사라지게 된다.

김=두부분의 지적이 모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강북 지역 뉴타운 재개발 대상지역들은,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수북형 개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왕십리 뉴타운시범지구의 경우 주민들이 지역을 진면 철거하고 한꺼번에 재개발하길 원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워낙 작은 필지들이 밀집해 있어서 거의 40% 이상의 필지가 개발의 뼈대인 도로, 공원, 학교 터에 다 걸려, 철거 재개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문화·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곳, 지은 지 얼마 안되는 곳은 최대한 보호하겠다.

사회=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 못다한 말이나 의견으로 좌담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

이=서울시 전체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개발 기준을 마련해 모든 뉴타운에 적용해야 한다. 또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생태마을, 공동체를 중시하는 공동주거, 미래주택 에너지 단지, 마을만들기 사업방식 도입 등 실현적 차원의 선례를 남기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포함시켜 명문화해야 한다.

윤=뉴타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외부에서 중산층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단기간에 뉴타운 사업을 벌이러다가는 미래를 내다본 환경친화적 도시를 만들 수 없다. 시는 새롭고 다양한 주택유형을 개발해 내고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살뜰해, 점진적이고 사담 중심인 재개발로 이끌어야 한다.

김=과거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험적인 방식을 고려하겠다. 이미 시범지구엔 생태 개념을 포함해, 공동체 중심의 주거유형, 에너지절약형 개발방법, 생태기반 지표 등을 도입했다. 2차 뉴타운은 재입자 대책, 도시기반시설, 환경친화 요인 등을 더 가미해 시범 뉴타운보다 한 세대 더 발전된 2세대 뉴타운으로 끌고 가야 한다. 오늘 두분이 주신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시가 뉴타운사업을 끌여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적극 검토하고 참 고하겠다.

월까지 학교를 옮기고, 계성중학교는 2012년 3월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새로 옮기는 계성중·고교의 면적은 1만4천여평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성중고 측은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대로 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2012년 계성고교교를 옮긴 뒤 중구 대신동 터 1만1천여평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학교 재단에서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구/대구대신 기자 sunnyk@hani.co.kr

[한겨레] 2005-7-25 수도권 그린벨트에 대중골프장 첫 승인 양주·고양·화성 등 4곳

대한골프협회(회장 박정호)는 수도권 그린벨트내에 대중골프장 4곳을 승인했다. 양주, 고양, 화성, 포천 등 4개 시군에 각각 1개씩의 대중골프장 건설을 승인했다. 양주시는 양주대신동 1만1천여평을 어둠골프장 입지를 허용하기로 한 뒤 수도권 그린벨트에 골프장이 승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회의록을 열고, 경기도가 지난해 9월 대중골프장 6곳의 입지 계획 등을 담아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이중 4곳에 골프장이 들어 서도록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4곳은 경기 양주시 만송리의 로얄린트리클럽 9홀(69만 1174㎡),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한양린트리클럽 9홀(22만3834㎡), 고양시 일산구 산황동의 고양골프장 9홀(16만1149㎡), 화성시 북양동 화성리디스클럽 골프장 9홀(14만8024㎡)이다. 이 골프장은 앞으로 환경·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그러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골프장 6홀(10만6400㎡)은 비행 구역의 고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결됐고, 시흥시 정왕동의 3홀 짜리 간아골프장(3만 6267㎡)은 계획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현재 조성됐거나 조성계획중인 전국이 골프장은 281곳으로 이중 194곳이 운영 중이다

허종식 기자

[한겨레] 2005-4-27 '임대주택 개편안' 뭉 담았다 도심 임대주택 늘린다 교도소터 등 도심 택지 활용

정부는 27일 도심에 있는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로 확보한 뒤 임대하되, 재중간 혼합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며, 입주자 소득 수준을 감안한 임대료 산정에 초점을 맞춘 '임대주택 정책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또 전세형 임대, 신축 임대, 매입 임대사업을 새로 도입 하거나 확대하기로 했다. 이것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주로 택지지구나 도시 외곽지역에서 이루어져 정작 임대주택이 필요한 도심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임대료 차등...계층간 섞여 살게

노후주택 매입 뒤 신축 임대 도입

'10년 장기' 늘려 주거안정 도모

■ 필요한 곳에 터 확보=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 임대주택 100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 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택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도심에 있는 교도소, 군사시설 이전 터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지 등이 적극 활용된다. 철도차량기지, 하수처리장 등도 활용한다. 큰, 철도차량기지와 하수처리장 외에도 임대주택이 들어신다는 뜻이다. 정부는 터 확보를 위해 주택건설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 조도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차량기지의 경우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은 있지만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군부대 이전 터 등 도시 율이 경우는 땅값이 비싸 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필요한 계층에게 제공=주택리 권교부 장관은 "도시 시민의 생업 여건과 교통 편의 등을 감안해 도심에 있는 기존 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국민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세형 임대와 신축 임대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형 임대 는 정부가 전세집을 빌린 뒤 저소득층에게 싼값에 다시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전세형 임 대는 다가가, 아파트 등 유형을 다양화한다. 임대료는 입주자 경제적 등을 감안해 월 10만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신축 임대는 정부가 낮은 불량주택을 매입한 뒤 철거하고 다시 지 어 임대하는 방식이다. 다만, 매입 임대나 전세형 임대보다 월 임대료가 다소 높을 전망이 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서울지역 두 군데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15평 기준으로 보 중급은 555만원, 월임대료는 14만~16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숙자, 홀로 사는 노인 등을 구제하기 위해 독산재용(원룸) 매입 임대사업도 병행한다. 정부는 또 기존의 국민 임대주택의 주거 면적이 너무 좁다는 지적에 따라 11~24평형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소 득계층이 혼합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격 제도도 개선해 1인 가구는 전용 40㎡ 이하 주택에만 입주를 허용하고, 입주자 선정 때 소득기준은 토지·자동차 등 자산소유현 황을 반영해 평평성을 높인다.

■ 10년 장기임대 시범사업 시행=임대주택사업에 장기자금을 유인하고 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다음달 중 택지공급 예정인 경기 용인 흥덕지구 안에 18~25.7평 규모의 임대 공동주택 529가구를 시범적으로 공급한다. 택지는 1필지 1만269평으로 청와 자격은 보합회사, 현·기금 등 제부채 투자자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 간접투자기구, 프로페트드림을 투자회사 등으로 제한된다. 택지 공급 가격은 조성원가의 85% 수준이고, 사업 수익성은 6.5~7.1%로 추정된다. 6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06년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곳의 25명형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3천만원, 월 임대료는 35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형 규모의 10년 장기 임대주택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5년 민간 임대에서 10년 민간 장기임대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은, 5년 임대와 2년6개월 뒤 분양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임대주택의 애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임대주택을 짓는 주택업체가 대부분 영세해 부도도 인한 임차자 피해가 속출한 것도 방향을 바꾼 요인이다. 지난해 말 현재 부도가 난 임대주택은 521개 단지에 12만가구에 이르는 전체 공급 물량(70만가구)의 17%에 해당된다.

정석구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한겨레] 2005-2-23 시청광장 용도변경안 또 보류 시의회 상정 안돼...회기간 처리 무산

서울시청 앞 광장을 시청사 부속용지로 포함시키는 서울시의 광장 용도변경안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가 또 보류됐다.

시 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의견정취안을 임시회 상임위 활동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상정하지 않아, 사실상 회기 안 처리가 무산됐다. 더욱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반대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다음 회기 상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김건수 도시관리위 위원장(한나라당)은 23일 "연초 임시회는 업무 보고 위주로 이뤄질뿐더러 시청광장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처리를 미뤘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좀더 들어본 뒤 3월말 열리는 다음 회기 때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관리위의 바른시정정책연합 쪽 간사인 정승우 의원(민주당)은 "일단 도시관리위에 의견정취안이 상정되면, 찬반 결과에 관계없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기 때문에 최종 결정주체인 도시계획위가 이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 회기 때도

의견정취안 상정 자체를 막아 이 안건이 도시계획위로 이관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경화 의원(열린우리당)도 "시청광장을 청사 부속용지로 포함시키는 서울시 안은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하는 광장을 시청 맘대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 의회 도시관리위 안건 상정은 위원장과 한나라당, 바른시정정책연합(열린우리당·민주당) 간의 합의로 이뤄진다.

시는 지난해 말 대규모 집회·시위를 막겠다는 이유로 시청광장을 공공재산인 '광장'에서 공용재산인 '공동청사'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시 의회는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의견정취 결자를 보류한 바 있다.

이종상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들과 시 의회 의원들의 찬반이 분분하기 때문에 간단히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시도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 전체를 위한 일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한겨레] 2005-2-10 '원지동 추모공원' 항소심도 서울시 승소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0일 서초구 청계산 저림이 시민운동본부 소속 서초구민 10명이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과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초구 주민 67명이 '2002년 4월 추모공원 예정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그린벨트해제결정 취소소송도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모공원 관련 공청회가 행정결자를 어긴 것도 아니고 추모공원 조성계획이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들어있지 않았다 해도 정책방향에 반대되지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을 세우려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을 때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까지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민의 화강 추이 및 벽체 화강장의 이용실태를 감안하면 서울시가 계획하는 추모공원의 규모가 무모하게 크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추모공원조성으로 인근 교통이 문제가 될만큼 악화된다거나 청계산 삼림이 훼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의 두배를 물어온 셈입니다. 착오든 고의든 과세를 했던 행정당국이 책임을 지고 되돌려줘야만 합니다.

도시계획의 규제에 묶여 한숨짓는 시민을 불합리한 토지평가와 부당한 세금경수로 두면 울리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합니다.

송기영/광주시 서구 화정동 928-2

[한겨레] 2004-12-2 미니골프장까지 고비 풀린다 건교부, 건설규제 완화...환경단체 반발 커질듯

환경단체들이 대형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 조처를 참여정부의 대표적 반환경정책으로 꼽고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미니 골프장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조처까지 내놓았다.

건설교통부는 9홀 미만의 골프장 설치를 훨씬 수월하게 하는 것을 뼈대로 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새 규칙은 기존의 최소홀수 기준인 9홀을 폐지해 9홀 미만 미니 골프장을 체육시설이 아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미니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는 용도 지역의 범위가 훨씬 확대된다.

이에 대해 황호섭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환경비상사국" 선언까지 하고 반환경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미니 골프장 규제완화 조처로 응답하는 것은 정부가 환경단체들의 목소리에 완전히 귀를 닫고 막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남기 김경수 기자 jsk21@hani.co.kr

재판부는 그린벨트 해제결정에 대해서도 "원지동 추모공원은 서울시민 뿐 아니라 경기도민과 인천시민 등도 함께 이용하게 돼 '광역도시계획' 대상이 되고 여러사정상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으로도 인정된다"며 "그린벨트 해제과정에서 건교부차관이 불참하고도 참가한 것으로 처리한 하자는 있지만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측은 서울시가 2001년 9월 원지동 일대에 화강로 20기, 장례식장 12실, 남골당 5만위 등을 설치키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것과 2002년 2월 건교부가 이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결정을 내린 것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며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2건 모두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겨레] 2004-12-8 도시계획 묶여 20년 재산피해

토지평가 '영장' 세금만 '영장'

행정기관이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둔 토지의 공시지가를 불합리하게 평가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주지 않아, 이들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1985년 광주시가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지정한 북구 문흥동 877-5에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20년 남짓 재산권 행사를 못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즉시 편입 토지를 사들여 보상하거나 타당성 없는 규제를 풀어줄 것을 바랐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행보를 양보해 공익을 위해 규제를 인정한다 해도 행정기관의 불합리하고 무성의한 과제 조치에는 시운함을 넘어 분노마저 느낍니다.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도 토지를 갖고 있으니 세금을 내야만합니다. 억울해도 세금은 한해 기르지 않고 꼬박꼬박 내왔습니다. 그러다 조세 부과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터무니 없이 산정된 것을 뒤늦게 알고는 기가 막혔습니다.

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이 터미널 편입용지보다 감경률이 높으리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린테도 평당 공시지가는 일반상업용지인 문흥동 876-3이 38만원, 터미널 편입용지인 문흥동 877-11이 43만원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값싼 토지를 소유한 시민이 더 많은 세금을 물었던 것입니다. 천만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행정당국은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0%를 감면한다는 조치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채 세금을 물려왔습니다. 1985년부터 14년 동안 내야할 세